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0년 2월
석사학위논문

중국의 동아시아 FTA 전략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반경

중국의 동아시아 FTA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ina's Strategy for EAFTA

2010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반경

중국의 동아시아 FTA 전략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노 경

이 논문을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 역 학 과

반 경

반경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2009 년 11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2장 FTA 이론적 기반	3
제1절 지역경제 통합의 의미	3
제2절 FTA의 특성과 경제적 효과	5
1. FTA의 특성과 정태적 효과	5
2. FTA의 동태적 효과	10
제3절 동아시아 FTA의 모형 및 경제적 효과 검토	19
1. 동아시아 FTA모델의 기존연구들을 통한 유형 검토	19
2. 동아시아 FTA모형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의 검토를 통한 과 제도출 및 전망	24
제3장 동아시아 FTA의 진전	30
제1절 동아시아 FTA 논의의 배경	31
제2절 동아시아 역내 국가별 FTA의 진전	33
1. ASEAN FTA	33
2. 한국의 FTA	37

3. 중국의 FTA	41
4. 일본의 FTA(EPA)	42
5. 동북아 역내국간 FTA 논의 현황	45
제4장 중국의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48
제1절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 추진내용	49
제2절 중국의 당면 문제점	51
1. 역내 문제점	51
2. 역외 문제점 : 미국과의 문제점	56
제3절 중국의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59
제5장 결론	64
참고문헌	66

표 목 차

<표 1> 동아시아 FTA모형의 기존연구의 주요한 결과	27
<표 2> 중-ASEAN FTA의 수출증가효과	36
<표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	40
<표 4>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	42
<표 5> 일본의 자유무역협정(EPA) 추진 현황	44
<표 6> 한중 교역규모 변화추이	56
<표 7>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변화추이	57

그 림 목 차

[그림 1] 국가우위의 결정요인들	15
[그림 2] 한·ASEAN FTA 협정 구성	35

상자 목 차

<상자 1>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모델	50
<상자 2> 중국의 FTA 단계적 이행방안	51

ABSTRACT

A Study on China's Strategy for EAFTA

Pan Qiong

Advisor: Prof. Park Ro-Kyung Ph .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dissertation paper has five sections and is organized as follows: Introduction, The theory-base of FTA, The progress of EAFTA, China's strategy for EAFTA as well as Conclusion. The paper aims to analyze multi-lateral trade situations among the East Asia nations so as to design the future economies' trend and model in the region. Meanwhile, it makes comparative study on the changes and factors in the process of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mong East Asian nations. At the same time, the paper tries to offer an overview of some aspects of China on some hot regional issues and implications concerned strategically. Simultaneously, expectation is made on the adjustments of development strategies and policies of East Asian economies. Nevertheless, only it has one theme that is for the sake of East Asia regional peace and development in the new era.

Globalization is an inevitable outcome of the growth of the world economy. It is, however, impossible for the entire world to benefit or to realize simultaneous development in all countries. Nor is it possible to eliminate th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regions, races and civilizations. It is unavoidably a long-term, complicated, ever-changing and tortuous process, accompanied with clashes of national interests, sovereignty and culture. This is simply the nature of the globalization. Asia has important place in the

world economy, it provides a base for the product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a large market for goods and services. Its progress therefore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growth of the world economy.

The eruption of East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has aroused heated debate on the re-evaluation of past economic achievements of East Asian countries and their economic development models. Controversy with regard to single East Asian Model or diversified East Asian Models has reoccurred. Global scale of debates regarding the causes of crisis explosion and the impacts of the crisis on Asia's futur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has not been ceased.

China's strong growth during the crisis had established a strong foundation for the whole of Asia. If China holds its ground well, it could prevent the region's growth rate from faltering. China is by far the biggest country in East Asia. It remains an important source of growth for this region. If China can maintain and continue its economic growth rates of the past fifteen years, its power and influence will expand greatly, first regionally and then in the world arena, the as cited "fourth pole" in the global economy. Because of its vast market size, China has also been a favorite trade and investment destination in the region.

The growing relations between China and Korea reveal the moves by Japan's neighbors to increase China's leadership position. China has the economic size and the growth potential. If China's progressive liberalization and economic restructuring programs are on track, and its growth rate is maintained. the post-crisis era could see a reversal of roles between Japan and China as the next economic superpower in Asia, in terms of the economic size and strength.

East Asian economies grow more open and interdependent. The countries in the region are vulnerable to disturbances from abroad and the high degree of capital mobility across countries in the world. More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s, foreign capital investment and more comprehensive swap

arrangements will work toward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When East Asian countries and the coordinating institutions work together, it will reduce harmful spillover effects of a country's unsound macro policy and financial market conditions on neighboring countries through interest rates, exchange rates, or trade and capital flows. It will help to speed up political convergence as well as economic policy convergence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900년대 중반부터 OECD와 WTO 같은 다자간 지역주의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며, 지역주의를 통해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모델을 제공하고, 심화된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또한 지역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학습효과, WTO 등 국제무역규범이정, 다자간 협상능력 증진과 다자간 협상 실험장으로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평가하기 시작했다.¹⁾

현존의 동아시아 FTA 구축방안은 현재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이슈들로 인해 구체적인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일본, 한국의 정부가 자국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일·한 FTA에 대하여 각국의 목적은 서로 다르겠지만 추구하는 바가 3개국의 경제협력의 현주소와 미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론적 검토, 각국의 추진현황, 전략과 가능성을 동아시아 FTA 형성 과정 중에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FTA는 국가간 대립과 갈등, 체제의 이질성, 경제발전 수준 및 경제력의 격차 등의 문제에 봉착하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북아경제통합은 현재 동북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간 경제협력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기존의 EU나 NAFTA가 걸어온 전통적 경제통합과는 다른 해소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아울러 동북아에서의 당장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주도권의 다툼보다는 협력과 협의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동아시아 FTA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동아시아 FTA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장기 비전을 가지고 공식적·제도적 경제통합을 향한 협력과 협의의 경험을 쌓아 감은 물론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공동정체성 연구 등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다. 협력적 동아시아를 향한 발걸음은 벌써 출발되었으며 동북아 각국의 긍정적인 자세와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이다.

1) WTO, *Regionalism and World Trading System*, Geneva, WTO Secretariat, 1995, p. 1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심화로 거대한 지역경제권을 형성하게 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경제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이 동아시아 FTA 추진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인 문헌 조사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FTA 이론적 기반에서 지역 경제통합의 의미, FTA의 특성과 경제적 효과과 동아시아 FTA의 모형 및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제 3 장에서는 동아시아 FTA의 진전에서 동아시아 FTA논의의 배경과 동아시아 역내 국가별 FTA 의 진전을 조사해 볼 것이며, 제 4 장 중국의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연구에서는 중국주도의 동아시아 FTA 추진내용과 중국의 당면 문제점 중국의 동아시아 FTA 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 제 5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제2장 자유무역지역 이론적 기반

제1절 지역경제 통합의 의미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란 일정한 지역 내에 위치한 국가들간에 생산물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역내 시장의 경제적, 기술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국가 간 경제협력의 형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²⁾ 이러한 경제통합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경제 통합의 정도에 따라特惠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관세동맹(Custom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의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³⁾

첫째特惠무역협정은 협정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무역은 아니더라도 협정당사국들간에 상호 일정한 특혜를 줌으로써 역외 비협정국들에 대하여 차별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혜를 주는 상품들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렇게 제한된 범위의 상품들에 대하여 협정국들에 낮은 관세나 비관세장벽상의 특혜를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경제통합의 유형으로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 적용되는 협정을 말한다.⁴⁾ 둘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 내지 철폐하는 반면 역외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유지하므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무역굴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을 강화하고 있다. 1994년에 출범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그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셋째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회원국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해 관세 및 기타 무역

2) 손병해, 「경제통합론 :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7.8, pp.16~19.

3) Tinbergen, J.,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Amsterdam, North Holland Publishing Company, 1965에서 수정 인용.

4) 박도준,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상품무역 분야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한국·중국·일본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pp.9~11.

장벽을 완화하는 동시에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등 공동의 무역정책을 채택하는 경제통합이다. 그러나 역외국가들에 대하여 관세 등의 공동무역정책을 갖는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갈절 문제가 심각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중엽 독일의 Zollverein⁵⁾이 관세동맹의 효시가 되었으며, 2차 대전 후의 베네룩스 관세동맹을 위시하여 초기의 EC가 관세동맹의 형태를 가졌으며, 1995년 발족한 MERCOSUR 역시 관세 동맹의 형태를 띠고 있다. 넷째,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회원국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보장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유럽연합의 전 단계인 유럽공동시장(EEC)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는 더 나아가 1986년 7월 EC가 로마 조약을 개정하여 단일 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를 발동시킴으로써, 1992년도 말까지 상품, 노동, 서비스 등 총 282개의 역내 무역장벽을 폐지한다는 시장통합계획의 완성에 따라 1993년 1월 단일 공동시장을 출범시킨바 있다. 다섯째, 경제동맹(Economic Union)은 회원국간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화폐금융, 물가 및 세입 세출 등 거시정책과 노동 등 사회정책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장 진전된 형태의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⁶⁾

위의 분류는 경제통합 유형에 관한 연구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및 완전한 경제통합의 단계로 구분한 Balassa(1956)⁷⁾의 연구와는 약간은 다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맥락은 동일하다. 이상을 비교하여 경제 통합의 개념을 살펴보면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무역상의 특혜조치가 이루어지는 영역까지도 경제통합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Balassa의 연구를 좀더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경제통합의 정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부문에서 공동 의사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권이 떨어진다. 또한 Balassa의 연구와 같이 경제통합을 하나의 과정임과 동시에 상태로 보고 있으므로 이상의 제 유형

5) 관세동맹 "Zollverein"(custom union); 19세기 중엽 독일은 정치통일이전에 경제적 통일을 구상하여 1818년 프로시아가 국내관세를 폐지했고, 1848년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모든 독일인 국가들이 가담함. 이것으로 독일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함.

6) Jeffrey A. Frankel, *Regional Trading Blocs : In the World Economic System*,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7., pp.1~2.

7) Bela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George Allen & Urwin Ltd., London, 1969.

들은 완전한 경제통합 즉, Balassa의 경제통합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정치적 통합까지의 단계로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서 하나의 경제 통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 2 절 FTA의 특성과 경제적 효과

1. FTA의 특성과 정태적 효과

가. FTA의 개념과 특성

(1) FTA의 개념

FTA는 2개국 이상이 상호무역에서의 모든 재화(자본서비스 제외)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철폐하지만, 타국들에 대해서는 원래의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통합지역을 결성한 형태이다.⁸⁾

그런데 회원국들간의 관세가 다르게 유지되는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역외국들로부터의 수입이 고관세를 부과하는 회원국으로 유입되지 않고, 고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저관세의 회원국을 통해 고관세의 회원국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저관세회원국으로 무역이 편중되는 현상을 무역편향 이라고 한다.

FTA의 회원국들은 무역편향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수입되는 제품의 원산지가 회원국인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상세하게 원산지증명을 시행하여 수행하고 있다.

(2) FTA의 특징

① 국가차별

8) 표성렬, “FTA 구상과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6, pp.4~19의 내용을 전재함.

실제로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을 규정하는 자유무역협정은 국가차별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제무역에서는 상품차별과 국가차별이라는 두 가지 형식의 차별이 존재한다. 먼저 상품차별은 상품마다 다른 종가세율의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관세율이 석유에는 20%, 시계에는 50% 등과 같이 다르게 부과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품차별은 무수히 많아 오히려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차별은 같은 상품이라도 수출국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카메라를 수입하는 경우에 독일제에는 20%, 한국제품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차별의 사례가 된다.

②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적 특성

관세동맹이론의 선구자인 Jacob Viner(1950)는 관세동맹(또는 다른 형식의 특혜무역)은 자유무역요인들보다는 보호무역요인들을 더욱 강력하게 결합시킨다는 중요한 가설을 제시하고, 이러한 협정이 회원국들의(잠재적) 후생을 증가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득력있게 주장했다. 특히 그는 관세동맹과 같은 경제통합이 다음과 같이 서로 반대되는 두 경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i) 관세동맹은 회원국들간의 경제과 무역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을 보다 더 증가시킨다.

ii) 관세동맹은 역외국들로부터의 무역과 경쟁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보호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어, 관세동맹은 보다 더 강력한 보호무역으로의 진전을 초래한다.

③ 후생증가효과의 불확실성

관세동맹과 같은 지역경제통합협정이 특혜무역협정을 통해 후생을 증가시킬지의 여부는 자원재배분에 따른 무역의 창출효과 및 전환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하므로 불확실하다.

나. FTA의 정태적 효과

(1)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Jacob Viner(1950)의 주장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은 관세동맹의 결성은 자유무역조치이므로 후생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바이너는 관세동맹의 결성을 그 이전보다는 강력한 자유무역과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의 요인들을 모두 결합하는 것이어서, 자원의 국제적 배분과 후생을 개선시킬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바이너는 무역창출(Trade Creation)과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의 개념을 중요한 분석도구로 사용했다. 그에 따르면, 관세동맹의 결성으로 무역창출의 영향이 무역전환의 영향보다 크면 자원배분과 후생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고, 무역전환의 영향이 더 크면 자원배분과 후생이 악화된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은 어떤 상품들의 국가별 생산위치(the locus of national production)를 이동시킨다. 이러한 국가별 생산위치의 이동으로 어떤 새로운 무역이 창출될 때,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창출을 발생시켰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국가별 생산위치의 이동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어떤 무역(수입원천)을 단순히 전환시킬 때, 관세동맹이 무역전환을 초래했다고 한다.

한편 Meade(1995), Lipsey(1957,1960,1970), Gehrels(1956) 등은 Viner가 다음과 같은 소비효과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FTA의 결성으로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소비자들에 대한 수입품의 가격은 하락한다. 특히 무역창출이 발생하면 수입품의 가격은 더욱 크게 하락하고, 무역전환이 발생하면 가격은 작게 하락한다. 따라서 국내소비자들의 수입품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 아니라면, 국내의 수입품소비는 반드시 증가한다. 그러므로 관세동맹에 의한 이러한 수입품의 소비증가는 실제로 관세동맹의 소비효과가 된다.⁹⁾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H.G. Johnson(1962)은 관세동맹의 생산 및 소비효과를 결합하여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① 무역창출

9) El-Agraa, Ali M.,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Macmillan Press Ltd., 1989, pp.49~63

1,2,3국으로 구성된 세계를 가장하자. 자유무역지대 결정 이전에 금지 관세가 존재하여, 어떤 상품 가격을 P , 종가세율을 t 라 하면 다음이 성립된다고 가정하자.

$$(2.1) \quad P_1 < P_3 (1+t_1)$$

$$(2.2) \quad P_1 < P_2 (1+t_1)$$

$$(2.3) \quad P_2 < P_3 (1+t_2)$$

$$(2.4) \quad P_2 < P_1 (1+t_2)$$

여기서 (2.1)과 (2.2)식은 1국이 금지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3)과 (2.4)식은 2국도 금지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1과 2국이 FTA를 결성하고, 1국과 2국의 상호무역에는 관세를 철폐하지만 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기존의 자국관세를 계속 부과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P_1 > P_2 > P_3$ 여서 그 상품의 생산에 있어 3국이 가장 효율적이며 1국이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가장하자.

이러한 경우에 FTA의 결성으로 1국은 국내생산을 포기하고 2국으로부터 그 상품을 수입하는 무역창출(Trade Creation)이 발생한다.

② 무역전환

이제 (2.1)식 대신에 다음의 조건이 성립하여 1국이 2국과 FTA를 결성하기 이전에 3국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자.

$$(2.5) \quad P_1 > P_3 (1+t_1)$$

1국과 2국이 FTA를 결성하여 상호간의 무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면, 2국의 상품은 1국의 국내시장에 P_2 의 가격으로 공급될 것이다. 그런데 $P_2 < P_3 (1+t_1)$ 이라면, FTA의 결성 이후에 1국이 수입하는 상품의 수입선은 3국에서 2국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이 발생한다. 그리고 $P_2 < P_1$ 이어서, FTA의 결성으로 2국의 상품이 생롭게 1국으로 수입되는 무역창출도 함께 발생한다.

그런데 FTA를 결성한 이후에 2국이 1국에 비해 관세율이 너무 높아 조정하

여 (2.3)식의 상황이 역전되어 $P_3 (1+t_2) < P_2$ 가 된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 $P_3 (1+t_2) < P_2 < P_1$ 의 상황이 되면, 1국은 FTA 결성 이후에도 여전히 역외국인 3국에서 상품을 수입할 것이다. 그리고 2국은 국내생산을 포기하고, 3국의 상품을 수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발생하는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를 역외무역창출(external trade creation)이라고 한다.

(2) 무역편향

$P_3 (1+t_1) < P_1$ 과 $P_3 (1+t_2) < P_2$ 여서 1국과 2국이 FTA의 결성 이후에도 3국의 상품을 계속 수입한다고 하자.

한편 $t_1 > t_2$ 여서 수입품의 가격은 1국이 2국보다 더 비싸지만, FTA 결성 이전에는 2국에서 3국 상품을 수입하여 다시 1국으로 수출할 수는 것보다는 1국에서 3국의 상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저렴한 상황인 $P_3 (1+t_2)(1+t_1) > P_3 (1+t_1)$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FTA 결성 이후에 1국과 2국 시장에서 그 수입품의 격차가 1국에서 3국 상품을 2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초과하고, 원산지규정이 없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에, 1국은 3국 상품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2국을 경유하여 수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저관세국으로 수입이 집중되는 무역편향(trade deflection)이 발생한다.

(3) 생산 및 투자 편향

만약 1국과 2국이 동일한 상품을 FTA 결성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었다면, 투자편향(investment deflection)이 없는 생산편향(production deflection)이 발생할 수 있다. 생산의 편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증가될 국가에서 특정 상품의 초과설비가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인 고정자본설비가 필요하여 투자편향이 명백히 뒤따를 것이다.

1국과 2국이 모두 FTA 결성 이전에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국이 금지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있어 다음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2.6) \quad P_2 < P_1$$

$$(2.7) \quad P_1 < P_2 (1+t_1)$$

상품가격이 (평균비용과 일치하는) 한계비용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균등한계 비용은 상품의 추가단위 생산량에 고용된 국내생산요소의 비용과 역외국인 3국에서 수입된 원자재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하자. 여기서 국내생산요소의 가격을 f , 소요된 요소량을 q , 역외국의 원자재가격을 p_3 , 소요된 수입원자재량을 q^* , 수입원자재에 대한 증가관세율을 t^* 라고 하고, 양국의 상품 단위생산에 대한 수입원자재의 소요량이 q^* 로 같다고 가정하면, 1국과 2국의 상품가격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

$$(2.8) \quad P_1 = q_1 f_1 + q^* p_3 (1+t^*_{1})$$

$$(2.9) \quad P_2 = q_2 f_2 + q^* p_3 (1+t^*_{2})$$

이제 양국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면 $q_1 = q_2 = q_3$ 라면, $t^*_{1} > t^*_{2}$ 또는 $f_1 > f_2$ 인 이유로 인하여 $P_1 > P_2$ 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FTA를 결정하여 상품의 역내무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면, 1국의 생산은 포기되고 생산은 2국으로 편향된다. 그러한 경우에 다음이 성립한다.

$$(2.10) \quad qf_1 + q^* p_3 (1+t^*_{1}) > qf_2 + q^* p_3 (1+t^*_{2})$$

$$(2.10.1) \quad q(f_2 - f_1) < q^* p_3 (t^*_{1} - t^*_{2})$$

=>국내요소비용 격차 < 수입원자재비용 격차

(2.10.1)식은 2국의 1국에 대한 국내요소비용의 격차가 관세비용의 격차로 나타나는 수입원자재비용의 격차보다 작아야 달성된다. 따라서 관세격차우위가 비교생산비격차를 초과할 경우에 생산편향이 발생된다는 Balassa의 명제 (proposition)가 성립한다.

또한 (2.10.1)식에서 수입원자재 가격 p_3 가 일정하고, 수입원자재에 대한 국내요소량의 비율 (q/q^*)도 일정하다면, 요소가격격차 ($f_2 - f_1$)이 낮고, 원자재의 관세율격차 ($t^*_{1} - t^*_{2}$)가 높을수록 생산편향과 그에 따른 투자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¹⁰⁾

2. FTA의 동태적 효과

가. 국제경쟁력 요인 확충

(1) 국제경쟁력의 개념

10) El-Agraa, Ali M., *ibid.*

국가경쟁력(country competitiveness)은 자국의 동원 가능한 제반 인적·물적 자원을 기초로 자국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국제경쟁력(international competitiveness)은 한 국가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외국 소비자들의 구매동기를 유발시키고, 그에 따라 해외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은 한 국가의 상품이 해외시장에서 갖는 점유율을 지속시키는 유지력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개발력을 동시에 의미하는 비교우위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한 국민경제의 국제경쟁력 크기는 보통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 관점에서 측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비교우위 요인이라고 한다.

가격경쟁력(price competitiveness)은 동질적인 상품을 외국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며, 비가격경쟁력(non-price competitiveness)은 동일한 가격으로 외국보다 성질이 우수한 제품이나 보다 나은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국제경쟁력은 ① 무역성과를 기초로 하는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점유율 변동지수, 산업내무역지수 등과 ② 특정 업종 또는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특화정도를 기초로 하는 국제경쟁력지수(international competitive advantage power index), 순수출비율지수, 무역특화지수 등으로 측정된다.¹¹⁾

(2)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

① 비교우위 요인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는 그 상품의 상대가격이 외국보다 저렴한 경우에 발생한다. 어떤 국가의 상품이 비교우위를 갖는 요인은 국가경쟁력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은 세계시장의 국제적 경쟁에서 자국 상품이 여타국 상품에

11) 이대근, 「한국무역론 : 한국경제, NIEs화의 길」, 법문사, 1995, pp.284~321.

대해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게 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어떤 국가에 대한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은 비교우위요인으로 작용하게 하여, 세계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말한다.

Porter(1990)는 그의 저서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에서 여타국들과 비교하여 자국산업의 해외시장이 갖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는 "Home-Diamond"라는 용어의 6가지 요인들을 기초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진입장벽요인들의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i) 규모의 경제 효과(scale economies) : 진입희망기업이 대규모로 진입을 하게 하거나 비용우위를 겪게 하여 진입을 저지한다. 특히 컴퓨터와 같은 첨단기술산업에서 생산, 연구, 마케팅, 서비스에서의 규모의 경제는 핵심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또한 유통, 판매력 활용, 자금조달, 여타 경영부문에서의 규모의 경제 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ii) 제품 차별화 : 브랜드인정(Brand identification)은 진입기업들 고객충실(customer loyalty)을 극복하도록 대규모 자금을 지출하게 하여 진입장벽을 발생시킨다.

광고, 고객서비스, 산업의 선도지위 구축(being first in the industry), 제품 차별(product difference)은 브랜드인식을 조성하는 요인들이다. 특히 브랜드인정은 청량음료, 점두시장 의약품(over-the-counter drugs), 화장품, 투자금융, 회계사무소와 같은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진입장벽일 것이다.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분배, 마케팅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함께 이중적으로 브랜드인정을 창출시켜야 할 것이다.

iii) 소요자본 : 특히 자본이 선행광고(up-front advertising)나 R&D에서와 같은 회복불능의 지출을 위해 필요하다면, 진입을 위해 소요되는 대규모 금융재원의 투자 필요성은 진입장벽이 된다. 자본은 고정설비 이외에도, 고객 신용, 재공품, 창업 손실의 충당을 위해 필요하다.

iv) 생산비 우위 : 크기나 규모의 경제와는 별도로 진입희망기업이 달성할 수 없는 비용우위를 기존기업이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우위는 학습곡선(learning curves)의 효과, 독점기술(proprietary technology), 최상 원자재 원천의 이용, 인플레이션 이전에 구입한 자산, 정부 보조금 또는 유리한 입지, 특허권(지적재산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v) 분배경로 : 제한된 도매점이나 소매점 채널로 인하여 기존 업체가 많을 수록 분배경로는 진입장벽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분배경로의 제약은 진입업체가 자체의 분배채널을 창출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vi) 정부정책 : 정부는 허가요건이나 원자재 사용의 제한과 같은 통제권을 발동하여 산업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제외시킬 수 있다. 예컨대 화물운송, 주류소매, 운임주선과 같은 산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여러 제약조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공해방지법규나 안전성법규 등을 이용하여 정부는 간접적으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다.

②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

포터(1990)의 분석체계는 기업들과 산업들이 탄생하여, 경쟁하는 방법을 배우는 국내환경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결합되어 작용하여 조성해주는 다이아몬드(Diamonds)라 불리는 6개의 광범위한 결정요인들(determinants)을 기초로 한다.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상호보강 시스템(mutually reinforcing system)으로 나타난다. 다음과 같이 어떤 결정요인의 주된 효과는 다른 결정요인들의 상태에 따라 발생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첫째 결정요인은 어떤 산업의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한 국가의 생산요소들을 나타내는 (생산)요소여건(factor conditions)이다. 생산요소에는 노동, 경작 가능 토지, 자본, 하부구조 등이 포함된다.

둘째 결정요인은 수요의 분단구조(segment structure), 세련되고 요구하는 구매자, 구매자 니즈(buyer needs)의 예측 등과 같은 국내수요의 구성요소와 국내수요의 크기, 독립적 구매자들의 수, 수요의 증가율, 초기 수요, 수요의 조기 포화(early saturation), 국내수요의 국제화 정도와 예상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요인은(저비용 우위인) 규모의 경제와 (차별화 우위인) 신기술 모두의 개발에 이익이 된다.

셋째 결정요인은 연관산업과 지원산업이다. 연관산업(related industries)은 경쟁을 하는 경우에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활동들을 기업들이 협조 또는 공유하는 산업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완적인 제품들을 생산하는 산업들이다.

한편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ies)은 그 기업에 원자재 또는 설비를 공급하는 공급자산업(Supplier industries)이다.

이와 같은 연관산업과 지원산업은 여타국들의 경쟁기업들보다 먼저 수요를 제공할 수 있어, 신기술의 원천이 되고, 미래 개발을 위한 경쟁력 유인(competitive incentive)을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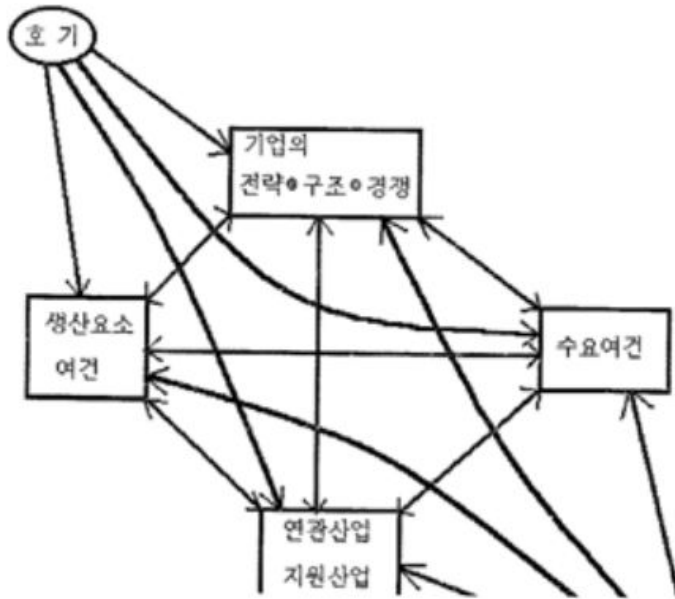
넷째 결정요인은 기업의 전략, 구조, 결쟁이다. 기업목표, 기업 구성원의 목표, 국내의 명성과 우선순위가 목표에 대해 주는 효과, 전략의 지속적 수행과 그에 대한 기업의 조직 및 경영관리 구조는 기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준다.

강력한 국내경쟁이 있는 국가에서 보다 강력한 국내기업이 탄생하여 해외경쟁에서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는 국내경쟁이 국내기업의 경쟁우위를 개선시키는 여러 방식으로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과정에서 진입한 새로운 기업들은 기존 업체가 주력하지 않는 부문에서의 주된 활동으로 새로운 기업들은 기존 업체가 주력하지 않는 부문에서의 주된 활동으로 새로운 분단시장을 형성하여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결정요인은 정부정책이다. 정부는 법률, 관세, 직접 금융지원, 인력정책 등을 통하거나 또는 정부조달, 표준규정 등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내산업의 경쟁우위에 영향을 준다.

여섯째 결정요인은 호기(chance)이다. 호기는 계획할 수는 없지만 발생하면 경쟁우위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opportunity)를 창출한다. 순수한 발명행위, (생명공학 등과 같은 기존 기술의 연장발전과는 별도로 나타나는) 중요한 기술적 단절, 석유위기와 같은 투입물 비용의 급격한 변화, 세계금융시장 또는 환율의 현저한 변동, 세계 또는 지역 수요의 폭증(surge), 외국정부의 정책 변화, 전쟁 등은 발명행위와 기업가정신에 충만한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우위에 큰 영향을 주는 호기이다.

[그림 1] 국가우위의 결정요인들



각국은 여타 산업들보다는 특정산업들에 적합한 [그림 1]에서와 같이 6가지 결정요인들의 특정 조합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는 환경을 경쟁우위의 창출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방식으로 형성하는 그 국가의 주된 4가지 특성들은 [그림 1]에서 사각형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특성들인 4가지 결정요인들은 상호영향을 준다.

이러한 4가지 결정요인에 대해 정부정책은 영향을 받고, 또한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그 4가지 결정요인도 영향을 받는다. 한편 호기는 경쟁우위의 조성환경에 대한 주된 4가지 결정요인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준다.¹²⁾

(3) 국제경쟁력 요인의 확충

국제경쟁력은 무역상대국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를 의미한다.

12) Moon, H.C, Rugman, A.M., and Verbeke, A., "A Generalized Double Diamond Approach to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Singapore",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7, No. 1, 1998, pp.135~150.

Scitovsky(1958)는 EEC에서 경쟁력강화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현저히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관세동맹으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EEC에서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수가 증가하여, 동맹 이전의 판매독점 및 과점 적이었던 회원국들의 국내시장구조는 외부압력에 노출되었다. 그 결과 비효율적인 기업은 도태되거나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쟁의 격화는 보다 효율적이며 비인간적으로 진행되어 신제품의 연구개발을 초래했다.¹³⁾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무역협정은 동태적으로 경쟁증가로 인한 적자생존의 결과와 통합으로 인한 시장확대에 따라 규모의 경제효과와 여타 동태적 경쟁력요인의 증가로 비교우위요인의 확충기회가 증가하여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

나. 기술진보와 투자촉진

(1) 기수진보

경쟁력은 시간에 따라 추구하는 수준들(aspiration levels)이 변하는 동태적 관점의 과제이다. 동태적 경쟁력의 개념은 기술에 집중된다.

특히 선진국의 동태적 경쟁력은 생산성을 기초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로 선도국의 생산성에 후발국의 생산성을 연관시키는 만회논쟁(catching up debate)으로 나타나며, 여기서는 경쟁력의 정성적 측면(qualitative view)을 측정하는데 대한 보완적 지표로서 단위가치(unit value)를 사용한다.

수출품의 단위가치는 경쟁력에 대한 이러한 뚜렷하지 않은(soft) 결정요인들에 대해 특수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이다. 수출품의 단위가치는 매출액을 판매수량으로 나눈 것이다.

개념적 측면에서 단위가치는 일종의 생산성 또는 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단위가치는 생산성의 지표이며, 그 산술식에서 분자는 금액기준으로 표시된다. 보다 고품질의, 더 높은 가공단계를 가진 중간 재와 더 양호한 마케팅기법이 적용되는 매출에서는 더 높은 단위가치를 제공한다. 그리고 분모는 자재 투입

13) Aiginger, K., "A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Dynamic Competitiveness of Countries",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 9, No. 1, 1998, pp. 159~188.

량의 가중치여서 투입물의 결합이 보다 효율적이라면 단위가치는 증가할 것이다.

단위가치는 교역조건지수에 의해 측정가능하다. 교역조건지수를 이용하면, 조직, 마케팅, 실퇴가능성 및 서비스요인과 같은 기술지표로 측정이 불가능한 뚜렷하지 않은 요인들을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역조건 상승은 고비용 국가가 가격민감 산업(price-sensitive industry)의 비중을 성공적으로 축소시키고 품질을 중요시하는 산업에서 시장점유율을 증가시켜 미래의 경쟁력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가격경쟁력 유지를 원하는 경우에 저렴한 노동력, 낮은 사회적 비용, 느슨한 환경보호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술경쟁력은 높은 생산성, 숙련도, R&D, 첨단 기술 산업, 단위가치를 강조한다. 이러한 두 관점을 융합하여 생산비 감소와 혁신 증가를 달성하는 것은 국내생산품의 해외판매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

특히 가격경쟁력은 기술경쟁력에 비해 달성하기가 용이하고 단기적으로도 더 가능하지만, 방어적이며 국민경제의 최종목표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단위가치는 품질, 소비자평가, 마케팅, 고객지향(customer orientation) 등에 의해 증가한다. 단위가치가 더 높을수록 저비용 경쟁으로부터 상품의 면역성을 높이며, 이러한 기술경쟁력을 측정해 줄 수 있는 면역성은 자국 상품이 위치한 품질계층(quality ladder)의 격상으로 나타난다.

동태적으로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계층을 높이는 기업과 국가는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하여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고, 높은 임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위가치는 기술지표(technology indicators)에 대해 보완적으로 각국의 동태적 기술진보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¹⁴⁾

관세동맹으로 인한 시장확대는 경쟁을 격화시켜 이로 인해 연구개발이 촉진되고, 연구개발의 촉진은 기술진보를 증가시켜 고도경제성장에 유리한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2) 투자촉진

인적자본, 기술, 정보에 관한 투자는 달성가능한 후생과 경쟁력 수준을 변화시키는 수단들이다.

14) Aiginger, K., *ibid.*,

FTA의 결성에 따른 경쟁력강화와 기술진보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증가가 필요하다. FTA의 결성 이후 수입경쟁산업들 중에서 다른 회원국들보다 비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자들은 경쟁격화로 심한 타격을 받으므로, 그 산업에서 투자를 회수(철수)하여 다른 유망한 산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

반면에 역외국의 생산자들이 관세동맹의 차별적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 산업에 투자하거나, 이와 비슷한 이유로 기존의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기업들의 투자도 증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세동맹은 국내산업의 재편성을 위한 투자증가 및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을 초래하여 국내투자를 촉진시킨다. 예컨대 1955년 이후부터 유럽에서는 차별적인 무역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거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되어 왔다.¹⁵⁾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FTA 결성이 수행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에 단기적으로 초과설비를 가진 과점산업들로 구성된 선진국의 경우에 기업들은 정규적인 단위노동비용에 대해 고정된 이윤율을 이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선진국에서는 케인즈적 실업(Keynesian unemployment)을 갖고, 현대적 공업부문에서 완전한 설비이용율과 고정된 실질임금을 갖고 그 생산품에 대해 신축적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개도국은 남반구에서의 잉여노동(surplus labor)이라는 실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구조적 비대칭성을 갖는 두 국민경제의 수직적 경제통합이 발생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생산요소가 더 높은 선진국에서 대량실직(massive job losses)의 "거대한 흡수 해협"(giant sucking sound)보다는 개도국의 잉여노동 활용을 위한 선진국의 대개도국 투자가 창출품에 강력한 수요를 창출하는 피드백효과(feedbacks : 반환효과)를 가져와 선진국 투자가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역내국의 총투자는 확대된 것이다.¹⁶⁾

15) Chacholiades, Miltiades, *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Policy*, MacGraw-Hill, Inc., 1978, pp. 546~561.

16) Blecker, Robert A., "The New Economic Integration ; Structuralist Models of North-South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 7, 1996, pp. 321~345

제3절 동아시아 FTA의 모형 및 경제적 효과 검토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현상 중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통합의 증가, 확대 및 심화추세이다.¹⁷⁾ 즉, 최근 국제경제 환경이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 그리고 다자간 협력체제로 변함에 따라 선진국경제 문턱에 있는 중국은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유럽에서는 EU에 의한 FTA가, 그리고 북미 및 중남미에서는 NAFTA와 중남미 국가와의 FTA, 아시아에서는 아세안회원국의 FTA 등이 이미 설립되어 지역별 지역경제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¹⁸⁾

본 절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모형 및 경제적효과와 관련된 기존연구들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둘째, 동아시아 FTA협정체결과 관련되어 모형을 제시한 기존연구 등을 검토하여 본 절의 실증 분석을 위한 경제적 효과 측정모형을 새롭게 제시한다. 셋째, 위의 둘째와 셋째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완성된 모형과 경제적효과들을 정리하여 동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최적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추출해 낸 후에 비모수적인 기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어떤 국가들이 FTA체결 후에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다섯째, 네 번째의 실증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동아시아지역에서의 FTA모형의 과제를 도출하고 장래전망을 제시한다.

1. 동아시아 FTA모형의 기존연구를 통한 유형 검토

가. 동아시아 FTA모형에 관한 기존연구

구기보·홍정륜(2008)은 동아시아 FTA모형을 1.동북아+아세안모형, 2. 한·중·일 +아세안모형, 3.안행형(雁行型)모형(일본이 선두에서고 싱가포르, 아세안 국가가 뒤따르는 모형), 4. 중화경제권모형(중국이 주도하고, 홍콩, 마카오, 아세

17) 윤기관·정인교·박상길(2004), p.163.

18) 박노경,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의 모형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한 과제도출 및 전망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경제연구소 학술연구총서 2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경제성장」, 조선대학교 동아시아경제연구소, 2008.12.30, p.27.

안이 참가하는 모형]으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Cheong(2002)은 1.선 한중일 FTA + 동남아시아모형, 2. AFTA중심모형, 3. 역내에서 이루어질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FTA를 통합하여 단일 동아시아 FTA를 결성하는 모형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박도준(2007)은 거시경제적효과, 수출입효과, 산업별효과를 다루었다. 정인교(2005)는 한·중·일 FTA체결이 GDP, 무역, 산업별로 미치는 효과, Cheong(2005)은 FTA가 한·중·일 및 아세안국가에 미치는 GDP, 자본스톡, 지역후생, 수출, 수입, 산업내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창재 외(2005)는 FTA가 갖는 거시경제적 효과(국내총생산, 후생, 수출, 수입, 교역조건, 산업별효과를 제시하였다. 박상길·윤기관·정인교(2006)은 FTA가 수출변동율, 수입변동율에 미치는 영향을, 윤기관·정인교·박상길(2004)은 FTA가 GDP, 산업별생산 수준, 수출, 3국간 국제분업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2절에서 제시하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동아시아의 FTA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나. 동아시아 FTA 모델의 기존연구를 통한 유형검토

(1) 구기보·홍정륜(2008)의 모형¹⁹⁾

동아시아 FTA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동아시아 FTA 모델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 FTA모델은 크게 개별국가들이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합의를 도출해 가는 경우와 특정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이에 호응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 Model 1과 Model 2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고 Model 3과 Model 4는 후자에 해당한다.

① 동북아 + 아세안 모델: Model 3

지역무역협정은 일반적으로 협정 대상국이 많을수록 그 효과는 커지겠지만 그 만큼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역내 모든 국가가 동시에 FTA를 체결할 경우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겠지만 각 국가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동아시아 FTA의 중간단계로 고려할 만한 소지역 FTA는 한·중·일로 대표되는 동북아 FTA와 아세안으로 대표되는 동남아 FTA로 나눌 수 있다. 한·중·일FTA와 아세안이 결합할 경우 형성될 동아시아 FTA는 중

19) 구기보·홍정륜(2008), pp.370~373의 내용을 전재함.

국에 의해서 제안된바 있으며, 소위 10+3(APT) 모델로 지칭되고 있다. 이 모델에서 말하는 동북아 FTA는 기본적으로 한·중·일FTA를 가상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대만, 홍콩 등이 참여하는 보다 광범위한 동북아 FTA가 될 수 있다. 물론 동남아 FTA 역시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것은 틀림없으나 동남아의 아세안 비회원국이 참여하는 더 큰 규모의 FTA가 될 수 있다.

② 한·중·일 + 아세안 모델: Model 4

이 모델은 한·중·일 3국에게 FTA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동북아 + 아세안 모델에 비해 떨어지는 모델이라 할 수 있으나 3국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모델이다. 한·중·일 3국은 2008년 현재 FTA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아세안과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③ 안행형 모델: Model 1

안행형(雁行型)모델은 기존 안행형 경제성장 모형을 FTA에 확대 적용한 경우를 가정한 모델에 해당한다. 1930년대 Akamatsu에 의해 제시된 안행이론은 국가들을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선도국(유럽-미주국가), 신흥공업국(일본), 후발국(다른 아시아국가)으로 분류하였다. Akamatsu는 아시아 저개발국이 일본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련의 수입-->국내생산-->수출의 연속적 진행을 "Wild geese flying pattern"에 비유하고 있다. 그 후 안행이론은 일본이 선두에 서고 NIEs, 아세안, 중국, 베트남 등의 순으로 경제발전을 해나간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용되었다. 안행형모델은 일본의 FTA추진추이를 보건데 동남아 지역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남아 국가들과 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④ 중화경제권 모델: Model 2

안행형 모델이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FTA모델이라면 중화경제권 모델은 중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동아시아 FTA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동남아 지역의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화교경제권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통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강했던 동남아 국가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해 가

고 있다. 즉, 중화경제권 모델은 중국이 홍콩, 마카오와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협정을 체결하고 아세안과 FTA를 체결 하면서 부각되는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CEPA를 통해서 홍콩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 있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 3국 중 가장 먼저 아세안과 FTA를 제안하고 체결함으로써 동남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2) Cheong(2005)과 정인교(2005)의 모형²⁰⁾

Cheong(2005)은 동아시아 FTA의 모형을 1.先 한·중·일 FTA + 동남아시아 모형, 2. AFTA중심모형, 3. 역내에서 이루어질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FTA를 통합하여 단일 동아시아 FTA를 결성하는 모형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3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이 개별국가 입장에서 유리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외교적 효과가 국가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적 차원에서 보면, 동북아는 한·중·일 3국이 먼저 FTA를 체결하고, AFTA와 통합하는 것이 유리하나, AFTA는 동북아와 일대일 통합보다는 한·중·일 개별 국가와의 FTA를 통해 동남아가 동아시아의 FTA 허브(hub)로 발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실제로 아세안은 이러한 방식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3) 이창재외 (2005)의 모형²¹⁾

이창재외(2005)는 한·중·일 FTA가 체결되는 모형을 제시하고,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분석을 통해서 FTA체결이 거시경제적, 무역에 미치는 효과, 제조업, 농·수산업, 서비스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4) Kawai and Wignaraja (2008)의 모형²²⁾

Kawai and Wignaraja (2008)는 CGE분석을 통해서 ASEAN+1(ASEAN+중국, 또는 ASEAN+한국, 또는 ASEAN+일본), ASEAN+3(ASEAN+중국, 한국, 일본), ASEAN+6(ASEAN+3+호주, 인도,

20) 정인교(2005), p.14.

21) 이창재외(2005), pp.1~187.

22) Masahiro Kawai and Ganeshan Wignaraja(2008), pp.1~38.

뉴질랜드)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ASEAN+6의 모형이 동아시아국가들에게 가장 이익이 많이 생기는 모형임을 밝혀내었다.

(5) Mohamed Hedi Bchir and Michel Fouquin (2006)의 모형²³⁾

동아시아에서 지역적인 경제통합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자유무역협정이 ASEAN국가, 일본, 중국, 한국, 인도, 및 유럽연합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를 CGE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6) Yiseok Hong(2004)의 모형²⁴⁾

ASEAN과 중국, 일본, 한국이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경우의 경제적인 효과를 후생효과를 포함시켜서 분석하였다.

(7) Jin, Koo, and Sul(2006)의 모형²⁵⁾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을 이용하여 NEAFTA(Northeastern Asia FTA)국가들인 한국,중국,일본의 FTA가 미국, 한국,일본,중국,EU, 기타세계국가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8) Wai-Heng Loke (2007)의 모형²⁶⁾

CGE모형을 이용하여 FTA의 각종 시나리오별(ASEAN단독, ASEAN+한국,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중국,한국, ASEAN+중국,일본, ASEAN+일본,한국, 한국+중국+일본, 중국+일본, 중국+한국, 일본+한국, ASEAN+한국,중국,일본)로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을 하였다.

(9) 박도준(2007)의 모형²⁷⁾

한·중·일 FTA추진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23) Mohamed He야 Bchir and Michel Fouquin(2006), pp.1~55.

24) Yiseok Hong(2004), pp.1~28.

25) Hyun Joung Jin, Won W. Koo, and Bongsik Sul(2006), pp.55~72.

26) Wai-Heng Loke(2007), pp.1~16.

27) 박도준(2007), pp.1~172.

GTAP Data Set를 활용하여 CGE모형을 설정하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았다.

(10) 오웅탁·정인교(1997)의 모형²⁸⁾

동북아시아지역과 동아시아지역의 자유무역지대의 경제적 효과를 CGE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였다. 즉, 정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동아시아지역내 경제협력체 창설로 기대되는 경제적 이유를 예측하였으며, 정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이 경제적으로 타당함을 보여 주었다.

2. 동아시아 FTA모형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의 검토를 통한 과제도출 및 전망

본 항에서는 동아시아 FTA모형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기존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된 과제를 중국의 입장에서 도출하고 전망을 하고자 한다.

가. 동아시아 FTA모형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²⁹⁾

(1) 구기보·홍정륜(2008)의 모형검토

구기보·홍정륜(2008)은 첫째, 동북아 + 아세안 모델: Model 3, 둘째, 한·중·일 + 아세안 모델: Model 4 셋째, 일본을 중심으로한 동아시아 FTA모형인 안행형 모델: Model 1 넷째, 중국을 중심으로한 중화경제권 모델: Model 2를 제시하였지만, 직접 이러한 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증을 시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모형에 대한 검토는 다른 모형을 검토함으로써 추론할 수 있다.

(2) Cheong(2005)의 모형검토

Cheong(2005, p.146)에서 보면 GDP에 미치는 효과는 ASEAN-China의

28) 오웅탁·정인교(1997), pp.65~89, 본 논문을 기존연구로 제시한 이유는 약 10년의 시차를 두고서 분석한 연구에 대한 검증결과가 어떤 결과를 보이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29) 박노경, 전개논문, pp.39~54.

경우(ASEAN, China, Japan, Korea의 순서), ASEAN-Japan FTA의 경우(ASEAN, Japan, China, Korea의 순서), ASEAN-Korea FTA의 경우(ASEAN, Korea, Japan, China의 순서)로 나타났다.

Cheong(2005, p.148)에서 보면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ASEAN-China의 경우(ASEAN, China, Japan, Korea의 순서), ASEAN-Japan FTA의 경우(ASEAN, Japan, China, Korea의 순서), ASEAN-Korea FTA의 경우(ASEAN, Korea, Japan & China의 순서)로 나타났다.

Cheong(2005, p.151)에서 보면,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ASEAN-China의 경우(China, ASEAN, Japan, Korea의 순서), ASEAN-Japan FTA의 경우(ASEAN, Japan, China, Korea의 순서), ASEAN-Korea FTA의 경우(ASEAN, Korea, Japan & China의 순서)로 나타났다.

(3) 이창재외 (2005)의 모형검토

이창재외(2005)의 거시경제적효과(p.53의 시나리오 II 자본축적모형)를 보면, 국내총생산효과, 후생효과는 한국, 중국, 일본의 순서였으며, 수출효과는 중국, 한국, 일본의 순서였다.

(4) Kawai and Wignaraja (2008)의 모형검토

Kawai and Wignaraja(2008)가 보여준 소득효과(p.36의 소득효과를 보여준 Table A1)의 순위를 살펴보면, ASEAN+China FTA효과(중국, 일본, 한국), ASEAN+Japan FTA 효과(일본,중국,한국), ASEAN+Korea FTA효과(한국, 일본, 중국), ASEAN+3(China, Japan, Korea)FTA(한국, 일본, 중국)의 순서로 나타났다.

(5) Mohamed Hedi Bchir and Michel Fouquin (2006)의 모형검토

Bchir and Fouquin(2006)의 p.20의 거시경제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아세안, 중국, 일본, 한국의 순서였다. p.22의 후생효과를 보면, 아세안, 일본, 한국, 중국의 순서였다. p.27의 교역조건효과를 살펴보면, 아세안, 일본, 한국, 중국의 순서였다.

(6) Yiseok Hong(2004)의 모형검토

Yiseok Hong(2004)의 p.11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 ASEAN+China(일본, 한국, 중국, 아세안), ASEAN+Japan(중국, 한국, 일본, 아세안), ASEAN+Korea(일본, 중국, 한국, 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ASEAN+China(아세안, 중국, 한국, 일본), ASEAN+Japan(아세안, 일본, 한국,

중국), ASEAN+Korea(아세안, 한국, 중국, 일본),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ASEAN+China(아세안, 중국, 한국, 일본), ASEAN+Japan(아세안, 일본, 한국, 중국), ASEAN+Korea(한국, 아세안, 중국, 일본)의 순서였다.

(7) Jin, Koo, and Sul(2006)의 모형검토

Jin, Koo, and Sul(2006)의 p.67의 <Table 4>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역조건효과(한국, 일본, 유럽연합, 미국, 기타세계국, 중국), GDP효과(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기타세계국), 가계소득효과(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미국, 기타세계국), 자본소득효과(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미국, 기타세계국)로 나타났다.

(8) Wai-Heng Loke (2007)의 모형검토

Wai-Heng Loke(2007)의 p.11의 분석결과를 보면 후생효과측면에서 일본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아세안, 한국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9) 박도준(2007)의 모형검토

박도준(2007)의 p.117의 <표 4-1>를 보면, K-J FTA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118의 <표 4-2>를 보면, K-C FTA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유리하며, <표 4-3>을 보면, K+C & K+J에서 K+C가 유리하였으며, p.119의 <표 4-4>를 보면, K+J+C의 경우에는 일본, 한국, 중국의 순서를 보였다.

(10) 오웅탁·정인교(1997)의 모형검토

오웅탁·정인교(1997)의 p.83의 <표 5>를 보면, 실질GNP효과(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일본, 유럽연합, 미국의 순서), 명목소득증가율(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유럽연합, 미국의 순서), 수출증가율(한국, 홍콩,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유럽연합, 미국의 순서), 교역조건(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유럽연합, 미국, 한국의 순서), 무역수지(대만,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 미국, 유럽연합의 순서)로 나타났다.

나. 동아시아 FTA모형의 검토를 통한 과제도출 및 전망

본 항에서는 위에 동아시아 FTA모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한 중국의 입장에서 도출하고 전망을 하고자 한다.

<표 1> 동아시아 FTA모형의 기존연구의 주요한 결과

학자별 기존연구	기존연구의 주요한 결과
Cheong(2005)	-GDP효과: ASEAN-China FTA(ASEAN, China, Japan, Korea) ASEAN-Japan FTA(ASEAN, Japan, China, Korea) ASEAN-Korea FTA(ASEAN, Korea, Japan, China) -후생효과: ASEAN-China FTA(ASEAN, China, Japan, Korea) ASEAN-Japan FTA(ASEAN, Japan, China, Korea) ASEAN-Korea FTA(ASEAN, Korea, Japan&China) -수출효과: ASEAN-China FTA(China, ASEAN, Japan, Korea) ASEAN-Japan FTA(ASEAN, Japan, China, Korea) ASEAN-Korea FTA(ASEAN, Korea, Japan&China)
이창재(2005)	-GDP효과: 한국, 중국, 일본 -후생효과: 한국, 중국, 일본 -수출효과: 중국, 한국, 일본
Kawai and Wignaraja(2008)	-소득효과: ASEAN+China FTA(중국, 일본, 한국) ASEAN+Japan FTA(일본, 중국, 한국) ASEAN+Korea FTA(한국, 일본, 중국) ASEAN+3(China,Japan,Korea)FTA(한국, 일본, 중국)
Bchird and Fouquin(2006)	-거시경제효과: 아세안, 중국, 일본, 한국 -후생효과: 아세안, 일본, 한국, 중국 -교역조건효과: 아세안, 일본, 한국, 중국
Yiseok Hong(2004)	-무역수지효과:

	<p>ASEAN+China FTA(일본, 한국, 중국, 아세안) ASEAN+Japan FTA(중국, 한국, 일본, 아세안) ASEAN+Korea FTA(일본, 중국, 한국, 아세안)</p> <p>-수출효과: ASEAN+China(아세안, 중국, 한국, 일본) ASEAN+Japan(아세안, 일본, 한국, 중국) ASEAN+Korea(아세안, 한국, 중국, 일본)</p> <p>-후생효과: ASEAN+China(아세안, 중국, 한국, 일본) ASEAN+Japan(아세안, 일본, 한국, 중국) ASEAN+Korea(한국, 아세안, 중국, 일본)</p>
Jin, Koo,and Sul(2006)	<p>-교역조건효과: 한국, 일본, EU, 미국, ROW, 중국</p> <p>-GDP효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ROW</p> <p>-가계소득효과: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ROW</p> <p>-자본스톡효과: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ROW</p>
Wai-Heng Loke(2007)	<p>-후생효과 일본&중국, 아세안, 한국</p>
박도준(2007)	<p>K+J(일본, 한국) K+C(한국, 중국) K+C, K+J(K+C, K+J) K+C+J(일본, 한국, 중국)</p>
오웅탁·정인교(1997)	<p>-GNP효과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일본, EU, 미국</p> <p>-명목소득증가율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EU, 미국</p> <p>-수출증가율 한국, 홍콩,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EU, 미국</p> <p>-교역조건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EU, 미국, 한국</p> <p>-무역수지 대만,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 미국, EU</p>

<표 1>에서 보면, 중국이 택할 수 있는 FTA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아세안 FTA모형을 택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중-아세안 FTA 모형은 GDP효과에서 (아세안, 중국, 일본, 한국)순으로 중국이 GDP효과가 상대적으로 좋고 후생효과에서 (아세안, 중국, 일본, 한국)순으로 중국이 후생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또 수출효과 면에서도 (중국, 아세안, 일본, 한국)으로 중국이 앞서고 있다.

둘째, WAI-Heng Loke (2007)모형을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이 효율적이고 한국도 효율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중-일 FTA는 중국의 효율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제3장 동아시아 FTA의 진전

세계적인 지역주의(Regionalism) 강화 움직임은 동아시아 지역의 결속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켜 주고 있다. 결속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경제협력'이란 개념이다. 여기서는 경제협력을 사전적 의미에서 '서로 돕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것' 이외에 시장통합을 위한 협상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³⁰⁾

지역주의는 GATT 또는 WTO 체제를 의미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세계주의(Globalism)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등의 형태로 지역 내의 경제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란 일정한 지역내에서 국가별 고유의 정책 특히, 경제정책이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가적 고유 경제정책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공동의 경제정책을 증대시켜 역내 국가들 간에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지역경제통합은 대부분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FTA를 지역주의 또는 지역경제통합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로 교역창출과 교역전환을 들 수 있다. 지역경제통합 출현의 배경에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 이외에 정치·외교, 국내 경제개혁이 수단, 다자체제에 대한 보완, 환경·농동 등 특정분야 법제의 조화 등이 목적이 있다.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의 확산과 FTA 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하는 것도 FTA 확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협력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FTA(EAFTA)의 논의 배경, 역내 국가들의 FTA의 진전, 그리고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30) 최세균·이대섭·주현정, 「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 부문 연구(1/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R553, 2007.12, pp.7~8.

제1절 동아시아 FTA 논의의 배경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한 논의는 유럽의 지역주의 강화와 이에 영향을 받은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의 지역주의에 자극을 받아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1)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에서 출발되었으며, 주로 민간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예를 들면, 1960년대 후반에 태평양·아시아자유무역지역(PAFTA)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을 비롯하여, 태평양경제협력회의(PBEC) 창설(1968년)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아시아 지역에 신흥공업국들이 등장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동아시아공동시장, 동북아공동체 등에 대한 제안과 담론이 시작되었다. 1989년대에 들어와서는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가 창설되었고(1980년), 1989년에는 정부간 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설립되면서 민간과 정부 차원의 협력사업이 공존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지역주의 강화 및 북미 지역의 NAFTA 탄생 등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동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이다. 동아시아 경제협력(또는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1990년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의 '동아시아 경제그룹(East Asian Economic Group: EAEG)' 구상 제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견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내세우는 전략을 택하게 되었다.

EAEG(이후 동아시아경제협력회의, 즉 EAEC로 개칭됨) 제안에 대한 관련국들의 입장은 차이가 컸다. 미국, 일본, 중국, ASEAN 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EAEC 설립에 대해 미국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여기에 일본이 가세하면서 중국 등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EAEC 설립은 실패하였다.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예 따른 아시아적 발전론과 가치 논쟁은 1990년대 후반 발생한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의미가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

31) 최세균·이대섭·주현정, 상계보고서, pp.8~11.

에서는 경제협력이 필요성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통해 이 지역의 약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고, 지역통합 움직임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ASEAN 국가들은 자국 우선 정책을 실시하면서 회원국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었고, ASEAN 국가들 간의 금융·통화 협력에 합의했으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의 대부분은 역외국(미국, 일본, 중국, IMF 등)으로부터 오는 등 ASEAN의 역할에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1998년 일본과 말레이시아 주도로 시도된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AMF는 중국과 미국의 반대로 실패하고 역내 국가들의 양자 간 통화스왑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수준의 치앙마이 협정(Chiang Mai Initiative: CMI)에 머무르게 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제도적 경제협력체 형성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1997년)가 촉매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제도적 형태를 갖추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교역 의존도가 높아진 것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1997년에 ASEAN+3(APT)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ASEAN+3은 동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 ASEAN 출범 30주년을 맞아 ASEAN이 동북아 3개국(한·중·일)을 초청함으로써 정상회담 체제로 탄생한 것이다. ASEAN+3은 성격상 구속력 있는 공동의 실천계획이나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나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협력방향은 산하의 외교, 경제 및 재무 등 관련 각료급 회담에서 부문별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대부분 협력의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998년 APT에서는 한국이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설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ASEAN 국가들은 ASEAN 정상회담 기간에 ASEAN+3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가 ASEAN+3 체제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APT에서는 한국이 경제협력 실천을 위해 제안한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민간 중심)과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정부 중심) 구성에 합의하였다. APT정상회담에서는 '동아시아협력에 관한 공동성명(1999년)', '동아시아비전그룹 보고서(2001년)', '동아시아연구그룹 보고서(2002년)' 등이 채택되는 등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비전과 모멘텀을 형성하였다. 동아시아

아연구그룹 보구서는 26개에 달하는 협력서랍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역(EAFTA), 동아시아통화기금(EAMF) 등의 설립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2001년 제5차 ASEAN+3 정상회담에 제출된 EAVG 보고서는 동아시아 협력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역내 국가들의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EAC)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정치·안보 측면에서 역내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적자원개발과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증진, 문화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등을 과제로 포함시켰다. 중점 검토 사업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동아시아 포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등이 제안되었다.

2004년 APT 정상회담(라오스 제8차 회담)에서는 EAFTA 설립 추진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가 그룹 설치에 합의하였다. 또한 여기서는 동아시아공동체(EAC) 창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PT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확인하였고, 동아시아 정상회담(East Asian Summit: EAS)을 2005년부터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다(제1차 EAS는 2005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됨). 동아시아 FTA(EAFTA)는 2001년 11월 동아시아 연구 그룹이 처음으로 제안한 이후 2002년 APT 정상회의에서 EASG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APT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EAS와 EAFTA 설립을 권고하였다. 2004년 APT 정상회담에서는 EAFTA 추진이 합의되었다.

제2절 동아시아 역내 국가별 FTA의 진전

1. ASEAN FTA

가. ASEAN 역내 통합 추진 현황

(1) 1967년 ASEAN 출범

1967년 동남아 국가들의 공동안보를 모색하기 위한 경제적, 군사적 목적에서 경성되었다.³²⁾

- ASEAN 선발 6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 ASEAN 후발 4개국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2)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 ASEAN Free Trade Area) 발족

ASEAN 6개국이 EU, NAFTA 등 경제 블록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ASEAN은 1992년 최초 6개 회원국이 1993년부터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 선발 6개국은 2010년까지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ASEAN 선발 6개국의 평균 역내 관세율은 1993년 12.76%에서 2002년 2.39로 대폭 인하되었다.

(3) ASEAN 경제 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설립 거의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 역내 단일시장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세, 비관세장벽 철폐뿐 아니라 인력 자유화, 거시 경제 및 금융 정책, 인력 개발에서의 협조 강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방화 및 협력을 추진, 역내통합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ASEAN의 역외국과의 FTA 추진 현황

(1) ASEAN · 한국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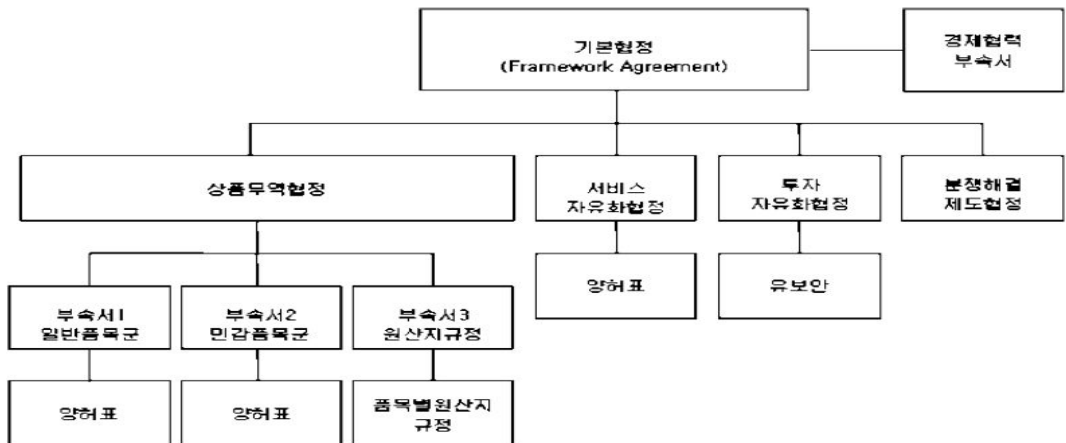
2003년 10월 한 · ASEAN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포괄적 경

32) 손우식, "ASEAN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4, pp.32~33.

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한·ASEAN FTA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적되었다. 2004년 3~8월간 총 5차례의 FTA추진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공동연구를 진행한 후 FTA 추진 보고서를 확정함에 따라, 2004년 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공동보고서를 채택하고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되었다.³³⁾

2005년 12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한·ASEAN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 제도협정」에 서명하였고, 2006년 8월에는 태국을 제외³⁴⁾한 모든 ASEAN 국가들과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이후 2007년 6월 1일자로 한·ASEAN FTA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서비스무역협정」은 2007년 11월 정상회의에서 서명되어 2009년 5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마지막 남은 「투자협정」은 2009년 4월 한·ASEAN FTA 협상에서 협상이 최종 완료되었다.

<그림 2> 한·ASEAN FTA 협정 구성



자료: 김영무(2006), 「5억 거대시장 아세안과의 FTA 기본협정 서명」, 『나라경제』, 1월호, p. 73에서 발췌, 수정.

33) 백승주, "한·ASEAN 관계의 발전과정 및 협력확대 방향",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9.6, p.58.

34) 태국은 상품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이 쌀을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 위하여 양허제품 목록을 허용하는 상품자유화 방식을 채택한 데 강한 불만을 표명하였음. 이후 국내문제로 인해 상품무역협정은 물론 서비스협정 가입 서명에 불참하였다가 2009년 2월 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상품 및 서비스협정에 서명하게 되었음.

(2) ASEAN · 중국 FTA

중국-ASEAN FTA는 2000년 11월 싱가포르 ASEAN+3 정상회담 기간 중 개최된 중-ASEAN 정상회의에서 당시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제안하였고, 2002년 11월 4일 중국과 ASEAN 정상들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개최된 중-ASEAN 정상회의에서 '중국-ASEAN간의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³⁵⁾

이후 2004년 11월 29일 중국은 ASEAN과 관세인하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FTA 형성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FTA 추진 공식 과정에서 ASEAN 10개 회원국은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하였고, 2005년부터 농산물을 제외한 품목들에 대해 단계적 관세인하를 시작으로 2010년 관세철폐 완료 시점까지 본격적으로 중국-ASEAN FTA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0년까지는 ASEAN 6개 선발국³⁶⁾과 2015년까지는 4개 후발국³⁷⁾들과 자유무역지대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고, ASEAN과는 별도로 태국 및 싱가포르와 개별적으로 쌍무적 FTA를 위한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김은국 2004).

<표 2> 중-ASEAN FTA의 수출증가효과

(단위: 백만 달러)

	아세안	중국	일본	미국	기타	세계
아세안	-3,167	13,008	-1,011	-799	-2,461	5,570
중국	10,614	-890	-512	-813	-1,557	6,842
일본	-325	-824	-	394	472	-282
미국	-2	-501	123	-	100	-280
기타	-475	-2,679	468	482	844	-1,361

자료: ASEAN, Forging Closer ASEAN-China Economic Rel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01.

35) 박정욱, "WTO 가입 이후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FTA 추진 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중국 전공 석사 학위논문, 2006.7, pp.60~61.

36)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37)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3) ASEAN · 일본 FTA

2003년 10월 8일 양국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일-아세안 FTA 기본 협정 문서에 서명.

양국 간 FTA 범위는 자유무역(상품 · 서비스 · 투자 분야), 거래 규칙(원산지 규정), 무역원활화(관세), 무역협력(SEMs · ICT · HR)로 구성

2008년, 필리핀에서 열린 고위 경제협의회에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마무리 지어졌으며, 태국 상무부의 무역협상부(Trade Negotiation Department)는 4년에 걸친 일-아세안 FTA 협상이 4개월 이내에 결론지을 것으로 예측됨.

또한 Winichai Chaem-haeng 태국 상무부차관은 5월에 열릴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일-아세안 FTA 공식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현재 태국은 내각의 승인과 의회의 비준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내각의 승인 후 주요 내용에 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

상품분야는 농업 · 어업 · 화학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품분야를 비롯한 무역 · 서비스 · 투자 분야는 나라별로 일본과 양국 간 합의를 봄.

FTA 체결시, 일본이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90% 이상이 비관세 품목이 됨.

또한 양국은 어류 · 바나나 · 가공식품 · 석유화학제품 · 합판 등 5300만 달러에 달하는 71개 군의 품목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나머지 품목은 5년 안에 쌍방 간 합의를 거쳐 점차 관세를 줄여나가게 됨.

양국은 무역 원활화 · 에너지발전 · 전기통신 · 인력자원 · 관광 분야 등을 포함한 14개 분야로 협상 분야를 점차 확대할 예정.

2. 한국의 FTA

한국이 수출 증시의 성장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GATT/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이었다.³⁸⁾ 돌이켜 보면, 1960년대 초반에 종결된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는 미국 · 일본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관세를 상당폭 인하하였으며, 1970년대의 도

38) 최낙균 · 정형근 · 김한성, "한 · 중 · 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8-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12, pp.81~85,

쿄라운드(Tokyo Round)에서 비관세장벽에 관한 규범이 정립됨에 따라 다자무역질서는 한국이 수출을 늘려갈 수 있는 대외적인 여건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1993년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협상에 따라 세계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무한 경쟁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국내의 내수위주의 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으나, 반도체·컴퓨터·가전·조선·자동차·철강 등으로 대표되는 수출주도형 산업은 세계적인 위치를 다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세계통상질서가 EU와 NAFTA의 출범 이후 지역 무역질서와 다자무역질서가 병립하는 양상으로 변모함에 따라 한국도 다원적 통상전략(multi-track approach)을 검토하게 되었다. 한국은 첫 FTA 추진 대상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칠레가 한국에 경제적 충격을 적게 미치면서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칠레가 중남미 지역에서 FTA 챔피언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FTA 협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 협상을 학습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한국은 1999년 12월 칠레와 FTA 협상을 개시하였는데, 1년 8개월 동안 협상이 중단되기도 하면서 거의 3년 만인 2002년 10월에 협상을 타결지었다. 한국 농업계의 반발과 국회의 정치적 지연에 따라 국회비준 절차는 양국간 공식 서면 후 1년 만인 2004년 2월에 마무리되었다.

그 후 싱가포르(2006년 3월 발효), EFTA(2006년 9월 발효), 미국(2007년 4월 타결), ASEAN(2007년 6월 상품협상 발효) 등과 FTA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현재 한국은 EU·캐나다·멕시코·인도 등과 공식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중남미 공동시장(MERCOSUR) 등과 FTA 협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한·일 FTA는 1998년 10월 양국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99년 3월 '한·일 경제협력 의제21'을 통해 기존의 협력 차원을 넘어선 관계강화 프로그램이 마련되면서 양국간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FTA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나, 양국간 투자촉진, 조세, 표준 및 인증, 지식재산권 등 장래 FTA 추진 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한·일 양국은 FTA 타당성과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 간에 진행하여 한·일 FTA가 양국 경제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를

2000년 5월 발표하였다. 2000년 9월에는 양국의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을 설치하였고, 2002년 3월의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 최종보고서에서는 한·일 FTA가 양국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03년 6월 양국 정상은 정부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 12월에 개최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공식 협상을 여섯 차례 개최한 바 있다.

한·일 FTA는 6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되었는데, 협상이 난항을 겪은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농산물 시장개방을 둘러싼 양국의 심각한 의견대립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농산물 개방범위를 전 품목의 50%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려는 데 반해, 한국은 향후 예상되는 주요국과의 FTA 협상과의 균형문제 등을 고려하여 90% 정도의 개방폭을 희망하였다. 한·일 FTA 논의 중에 일본은 필리핀·말레이시아 등 ASEAN 국가들과의 개별적 협상을 가속화하면서 한국과의 FTA에 대해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던 분위기가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농산물 개방 확대 요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더욱이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협상 자체가 중단되었다.

한편 한·중 간에는 2004년 11월 양국 정상회의에서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에 대한 민간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외경제 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이 양국의 간사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 3월 민간공동연구를 위한 MOU가 체결되었다. 2005년에 양 기관은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을 하였고, 2006년에는 산업별 영향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06년 10월에는 한·중 FTA에 대한 공동의 정책제안을 제출한 바 있다.

2006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2007년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범위, 산업별 영향분석, 민감품목의 보호방안 등을 다루었다. 중국은 1년간의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친 후에는 협상을 개시하자는 입장을 보였으나, 한국의 경우 한·중 FTA에 따른 국내 농업기반의 위축, 국내 산업공동화의 가속화 등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여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표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

발효/서명	협상	여건 조성
칠레 (2004 발효)	ASEAN (투자)	중국
싱가포르 (2006 발효)	캐나다	호주
EFTA (2006 발효)	인도	뉴질랜드
ASEAN (상품: 2007 발효)	EU	MERCOSUR
ASEAN (서비스: 2007 서명)	멕시코	페루
미국 (2006 타결)	일본	터키
	GCC	러시아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의 FTA 정책은 동북아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한국의 FTA는 아시아·미주·유럽 등 세계의 모든 주요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로서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주요 지역별로 FTA를 추진하였다. 미주의 경우 캐나다와 FTA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미국과는 FTA를 타결하였다. 또한 중남미의 칠레와 FTA를 타결하였고, MERCOSUR과는 FTA를 검토하였다. 유럽의 경우 EFTA와 개별적 FTA를 타결하고 ASEAN 전체와 상품 및 서비스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한국은 주요 지역별 FTA 거점(중남미: 칠레, 동남아: 싱가포르, 유럽: EFTA)과는 신속하게 FTA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한·미 FTA에서 보듯이 개방친화적이며 수준 높은 FTA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2003년에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무역·투자·서비스 및 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comprehensive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FTA 로드맵에 따라 효율적인 FTA 추진체계가 마련되면서 한국의 FTA 전략이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적으로 개방하고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정책을 마련하면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한국이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은 세계적 FTA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으며, 해외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절박한 정책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요 국가와 동시에 FTA를 추진함으로써 특정 산업에 있어 FTA의 이익과 손실을 상쇄할 수도 있다는 전략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중국의 FTA

중국은 1990년대까지 미국 등 주요국으로부터 매년 최혜국대우를 인전받는 절차를 거쳐야 GATT/WTO 회원국들과 동일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³⁹⁾ 미국 등 주요국 정부가 최혜국대우 연장법안 심의 과정에서 인권문제, 정치적 이슈 등 정치경제적 요인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자, 2001년까지 중국정부는 최혜국대우를 보장받는 WTO 회원국이 되기 위한 국내제도 정비 및 무역규범 개편에 통상정책의 주안점을 두었다.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중국은 홍콩(2003년 체결), 마카오(2003년 체결)에 이어 ASEAN(2005년 상품분야 발효, 2007년 서비스분야 체결), 파키스탄(2006년 체결), 칠레(2006년 발효), 뉴질랜드(2008년 체결) 등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하였다. 아울러 현재 중국은 싱가포르, 호주,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아이슬란드와 FTA 협상을 벌이고, 인도·한국·페루 등과의 FTA를 검토하고 있다.⁴⁰⁾

중국의 FTA 추진은 동북아 여타 국가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중국은 외교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를 활용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자국과 인접한 국가(예: 홍콩, 마카오, 파키스탄, ASEAN)와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중남미에서도 '조화외교'의 기치 아래 미국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⁴¹⁾

39) 최낙균·정형근·김한성, 상계보고서, pp.85~87.

40)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10월 기준으로 중국은 27개 국가 및 지역을 포함하는 9건의 FTA를 진행 중이며, 2005년 중국의 이 국가 및 지역들과의 무역규모는 3,500억 달러로서 중국의 무역총액에서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규 외(2006), p. 32 참조.

41) 후진타오 주석은 조화외교(和諧外交)를 신외교정책의 핵심 사상으로 강조하였는데, 조화외교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차별화된 가치관을 국제사회에 전파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다. 중국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결성한 상하이협력기구(SCO)에는 몽골, 카키스탄, 인도, 이란 등이 옵서버로 참여하였는데, 원바자오 총리는 2020년까지 SCO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장규 외(2006) 참조.

<표 4>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

발효/서명	협상	여건 조성
홍콩 (2003 체결) 마카오 (2003 체결) ASEAN (2005 상품분야 할효, 2007 서비스분야 체결) 파키스탄 (2006 체결) 칠레 (2006 발효) 뉴질랜드 (2008 체결)	싱가포르 호주 GCC 아이슬란드	인도 한국 페루

둘째, 주요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주도권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FTA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FTA는 선진국과 선진국 또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가 무역창출효과가 많으며, 개도국간의 FTA는 무역전환효과가 많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일본·EU 등과 같은 선진국과의 FTA 추진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며 ASEAN(경제적 실익 추구 및 동아시아 리더십 구축), GCC(에너지 자원 확보 및 중동지역에서의 교두보 확보), 파키스탄(무기수입국으로서의 중요성)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FTA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와 아울러 비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은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쨰우추취(走出去)' 전략과 FTA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쨰우추취' 전략은 해외투자와 다국적 경영을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전략적으로 자원과 에너지의 공급확보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중국이 ASEAN과 FTA를 체결하고 현재 호주, 칠레, 상하이협력기구(SCO), GCC 등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4. 일본의 FTA(EPA)

일본은 GATT/WTO 일변도의 정책을 견지하다가 1998년을 기점으로 다자 무역 자유화와 FTA(EPA)⁴²⁾를 병행 추진하는 통상전략으로 선화하였다. 이러

42) 일본은 FTA라는 용어보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사용하나 그 의미는 FTA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경우 FTA와 EPA를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한 전략변화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EU, NAFTA 등 거대경제권의 출현으로 위기감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교안보적 차원의 영향력 저하, 세계 주요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상실 등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였다. 아울러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었고, ASEAN 지역 등에서 중국의 진출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엿볼 수 있다.⁴³⁾

일본은 이러한 전략변화에 따라 2002년에 싱가포르와 EPA를 체결한 이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EPA를 체결하였다. 한국은 싱가포르 이외에는 ASEAN의 개별 회원국들과 별도의 FTA 협상을 벌이고 있지 않은 데 반해, 일본은 ASEAN 개별 회원국들과 EPA 협상과 동시에 ASEAN 전체와의 EPA 협상을 병행 추진한 점이 한국과 비교하여 특이하였다. 일본은 ASEAN 회원국들의 경제발전 단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별적인 FTA 협상이 바람직하지만, ASEAN의 공통분모적인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ASEAN 전체와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서는 개별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경우 그들이 협상을 주도하는 장점이 있지만, ASEAN 국가들이 요구하는 경제협력 및 인프라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ASEAN 전체로 협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일본은 멕시코와의 EPA 협정을 2005년에 발효하였으며, 칠레와는 2007년에 협상을 타결하였다. 또한 베트남·스위스와 FTA는 대체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GCC·인도·호주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FTA 협상은 중단되었지만 협상재개를 논의하고 있다.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일본의 EPA 협상 완료국을 보면 지역적으로 ASEAN 국가에 집중한다.⁴⁴⁾ 일본은

43) 최낙균·정형곤·김한성, 전계보고서, pp.87~89.

44) 일본의 FTA 체결의 로드맵에 따르면, (i) 국내 재계의 요망과 같은 경제적 기준, (ii) 동아시아를 강조하는 지리적 기준, (iii) 경제통합을 통한 안정적인 외교관계의 구축이라는 정치외교적 기준, (iv) 상대국의 준비상황 및 상대국과의 일본내 민감품목의 교역량과 같은 실현 가능성 기준, (v) 일본정부의 교섭처리능력과 같은 시간적 기준 등과 같은 다양한 판단기준에 따라 일본은 FTA 협정체결 대상국가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일본은 한국→ASEAN→중국→호주, 뉴질랜드→기타국 및 지역 등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정성춘(2004) 참조.

ASEAN을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ASEAN 국가들은 일본기업의 최종재 및 부품·소재제품의 수이국으로서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일본기업의 해외생산 기지 및 원자재 공급국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표 5> 일본의 자유무역협정(EPA) 추진 현황

발효/서명	협상	여건 조성
싱가포르(2002 발효)		
멕시코(2005 발효)		EFTA
말레이시아(2006 발효)	베트남	MERCOSUR
칠레(2007 발효)	스위스	이스라엘
태국(2007 발효)	한국	남아공
인도네시아(2008 발효)	GCC	캐나다
브루나이(2008 발효)	인도	
ASEAN(2008 발효)	호주	
필리핀(2008 발효)		

둘째,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적 주도권 경쟁 문제를 심각하게 의식한다. ASEAN 지역은 중국과 밀접한 무역 및 투자관계를 유지하며 소위 '화상(華商)'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의 적절한 제어가 없으면 이 지역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 경제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⁵⁾

셋째, 일본은 주요국과 맺고 있는 FTA를 경제연대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관세·비관세장벽 등 상품무역상의 장벽을 철폐하는 것만 아니라, 서비스, 인적이동, 환경, 금융, 분쟁해결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FTA와 차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소위 EPA의 포괄내용은 한·미 FTA와 비교해 볼 때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바, 일본은 농수산업 등 일본의 취약부문을 개방하지 않고 제조업과 서비스, 그리고 무역규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45) 중국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FTA 추진에서 시장 및 자원확보 차원으로 변화하는 데 반해, 일본은 기존의 해외투자를 바탕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FTA 추진에서 경쟁국을 견제하는 전략으로 변화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2007) 참조.

으로 평가하 수 있다.⁴⁶⁾

5. 동북아 역내국간 FTA 논의 현황

유럽 지역에서는 지난 1950년대에 지역통합이 시작되었으며, 북미에서도 1990년대에 NAFTA가 결실을 맺는 등 주요 지역에서 FTA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동북아 지역에서는 FTA에 대한 논의가 2002년에 시작되었다.⁴⁷⁾

중국의 주룽지 총리는 2002년 11월 개최된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검토를 공식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중국·일본의 국책연구기관(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발전연구중심, 일본: 총합연구기구)이 중심이 되어 한·중·일 FTA 연구를 진행하였다. 3국의 연구기관은 당초에 연구기간을 2002~05년의 4년으로 정하였으나, 2006~08년 3년간 산학 공동연구를 진행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동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동안 공동연구에서는 거시경제적 효과, 농어업, 주요 제조업, 서비스 등 업종별 효과, 한국·중국·일본의 업계의 입장 등에 대한 포괄적이며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2003년 연구에서는 거시경제적 효과분석과 각국 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4년과 2005년에는 농업,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수산업, 섬유산업, 철강산업, 일부 서비스산업 등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2006년에는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을 심화하여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원산지규정 및 3국이 기 체결한 FTA 민감분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동안 공동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03~05년 공동연구에서는 한·중·일 FTA가 3국 모두에 거시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3국 대다수의 기업들은 조속한 FTA 형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책 시사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는데, 일반적 결론은 한·중·일 FTA의 체결이 3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며 FTA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공동연

46) 일본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던 최종 단계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이슈 중의 하나는 금봉어의 수입문제였다고 한다. 일본의 금봉어 수입규모는 적지만 ASEAN 국가들과의 농수산물 협상에서 가급적 수입억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였던 것으로 보인다.

47) 최낙균·정형근·김한성, 전계보고서, pp.89~92.

구 결과는 서비스분야의 자유화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형태의 FTA가 보다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국 정상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산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된 후에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연구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한·중·일 FTA 출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북아 FTA에 대한 논의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동북아의 3국과 ASEAN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FTA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한·중·일 3국과 ASEAN(ASEAN+3) 정상 간의 회동은 1999년 마닐라에서 처음 이루어진 이래 정례화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동북아 3국 및 ASEAN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FTA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차원에서 동아시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설립을 제안하여 동아시아 협력논의를 주도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한·중·일 3국과 ASEAN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를 2001년 10월에 제안하였다. 2002년에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한·중·일 + ASEAN을 축으로 하면서, 호주·뉴질랜드까지 확대하는 동아시아공동체 창설을 제안하였다. 최근 일본은 이러한 제안을 보완하여 인도까지를 포함하는 16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동아시아 EPA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한편 중국은 2002년 ASEAN과 FTA 협상을 개시하고 2005년에 상품분야의 협상을 마무리함으로써 한·중·일 3국 중 가장 빠르게 ASEAN에 접근하였다. 동아시아FTA와 관련해서는 ASEAN+3 정상회의체제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⁴⁸⁾로 전환해야 한다고 2004년 초반부터 공식 제안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인도를 보였다.

현재까지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FTA 구상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국·일본·한국·ASEAN 등 참여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없

48) 2001년 동아시아 연구그룹(EASV) 보고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ASEAN+3 정상회의 체제를 동아시아 정상회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2002년 EASG 보고서에서도 EAS 체제로의 전환이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중장기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한 바 있다. 배금찬(2005) 참조.

는 상황이다. 특히 동아시아 FTA 구상은 경제발전 단계상의 차이가 심한 한·중·일 3국과 ASEAN 10개국에 더하여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을 포괄하여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비전 및 추진체계 등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제4장 중국의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역주의(Regionalism) 추세에 부응하여 활발하게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FTA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4년 중국이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후부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이전 동아시아 지역에서 몇 개의 FTA가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중·아세안 FTA 이후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아세안과 FTA를 추진하였다. 결국 중·아세안 FTA는 당사간 경제교류 증대 이외에 제3국에 경쟁적 FTA를 유발한 것이다.⁴⁹⁾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한·중·일 FTA를 제안 하였다. 한·중·일 FTA에 대해 일본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중국은 한국과의 FTA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의 다소 유보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07년부터 산학관 공동연극을 추진하고 금년에는 합의문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동남아에서 아세안과 FTA 체결에 이어 동북아에서도 FTA를 적극 추진 하면서 최근 중국에 의해 주도되는 동아시아 FTA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⁵⁰⁾ 물론 경제규모나 해외직접투자(FDI)에서 일본이 중국을 앞서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이 동북아 지역에서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일본이 동아시아 FTA를 주도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다만 동아시아 FTA 형성 과정에서 일본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⁵¹⁾향후 경제적 역량이나 의지적 측면에서 중국이 동아시아 FTA를 주도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⁵²⁾

49) 홍정륜, "중국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지역갈등",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국제지역학회, 2008.10.30. pp.458.

50) 홍정륜,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연구", 「중국연구」, 제43권(2008년 6월호), pp. 747~764.

51) 홍정륜(2008.10), 전계논문, pp.457~482.

52) 홍콩 문화보는 일본 PHP연구소의 전망 보고를 통해 중국의 경제규모가 5년내에 일본을 추월하고 2020년에는 양국의 경제규모가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하였다. 「연합뉴스」, 2008.06.27.

제 1 절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 추진내용

중국은 2003년 홍콩(마카오)과의 CEPA 체결에 이어 2004년 아세안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중·일 3국 중 동남아 국가(혹은 지역)와의 경제협력에서 앞서가고 있다. 53) 또한 중국은 한·중·일, 혹은 한·중 FTA에서도 상대국의 미온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중 FTA는 중국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2007년부터 산학관 공동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양국간 협상개시 전 합의문 채택을 남겨두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와 별도로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심도 깊은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 중국이 협상을 완료했거나 협상(혹은 연구) 중인 FTA만으로 중국이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이다. 중국의 FTA 진행은 중·홍콩, 중·아세안, 중·싱가포르, 중·일본, 중·한국 등 중국과 개별국가를 연결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중국이 필요에 따라 개별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며, 동아시아 국가 전체를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묶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이 실제 동아시아 FTA를 추진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중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중국의 FTA로드맵(Road Map)을 통해 동아시아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유추해 보자. 중국 상무부가 2005년 7월 발표한 '지역경제협력 참여 전략' 관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FTA 전략은 주로 <상자2>과 같다.⁵⁴⁾ 중국의 장기 FTA계획에는 세계 각국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다. 제1, 제2 단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우선적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홍콩-마카오-(대만)을 잇는 경제 라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상자2>에서 언급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경제와의 전반적인 협력관계'는 아세안과의 지역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동북아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1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항 경제블록은 동북아 중심의 지역경제협력지대임을 언급하

53) 홍정륜(2008.10), 전제논문. pp.460~462.

54) "具備區域經濟合作基礎：商務部初定中國策略", www.gx.xinhuanet.com, 2005.5.11.

고 있다.

중국의 FTA 로드맵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① 중국-홍콩-마카오-(대만), ② 중국-아세안, ③ 중국-동북아 등 세 가지 형태로 언급되고 있다. 즉 중국의 FTA 로드맵에서 '동아시아 FTA'라는 말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경제와의 전반적인 협력관계'라는 말을 통해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과의 전반적인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경제와의 전반적인 협력관계가 NAFTA나 EU에 상응하는 '동아시아 FTA'를 통해 실현될지, 아니면 ① 중국-홍콩-마카오-(대만), ② 중국-아세안, ③ 중국-동북아 등 중국과 개별적으로 연결된 경제협력라인을 통해 추진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상자1>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모델

0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중국-아세안, 중국-동북아 등 세 경제협력라인 ---<모델 1> 0 미주나 유럽에 상응하는 동아시아 FTA ---<모델 2>

중국이 '동아시아 FTA'를 실현하기 원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1, 제2단계에서 언급된 동북아 경제협력 내용이다. 제1단계에서 중국은 미주, 유럽 지역과 대등한 동북아 중심의 지역경제협력지대를 실현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제2단계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은 중국의 동북3성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중국이 의도하는 미주, 유럽 지역에 상응하는 경제협력지대가 '동아시아 경제협력지대'가 아닌 '동북아 경제협력지대'임을 밝히고 있다.

상술한 내용에 근거한다면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FTA'라는 경제협력체를 통해서보다는 중국과 연결된 경제협력라인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상자2> 중국의 FTA 단계적 이행방안

첫째, 아세안과의 지역경제협력을 가속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경제와의 전반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환경을 마련한다. 특히 2010년에는 미주 및 유럽지역과 대등한 동북아 중심의 지역경제협력지대를 형성한다. 또한 홍콩, 마카오와의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을 구축함으로써 '하나의 중국'원칙을 제고한다. 우선적으로 중국-홍콩-마카오 등 '3개 경제권의 통일'을 실현하고 이어서 중국과 대만간의 협력 방식 및 채널을 검토한다.

둘째, 반드시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하여 중국의 동북3성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을 촉진한다.

셋째, 중국의 거대한 구매력 우위를 활용하여 러시아, 호주, 중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지역 등과의 협력파트너관계 및 지역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심화시킨다.

넷째,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 개도국과 양자간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한다.

다섯째, 미국시장과 유럽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품과 특정 분야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유럽과 일부 개도국이 체결한 로메협정(Lome Convention)의 방식을 참고하여 최빈개도국과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에 대해 일방적으로 1차산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

제 2 절 중국의 당면 문제점

1. 역내 문제점

동아시아에서 지금까지 발표한 연구 성과에서 모두 임의의 어느 두 또는 세 개 국가에서 FTA를 체결하거나 동아시아 역내국가가 모두 참가하는 FTA를 체결해도 모두 서로간의 무역을 촉진할 수 있고 각자의 경제증가율과 경제 복지를 제고할 수 있다.⁵⁵⁾

그러나 구체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각 국 정부의 입장은 서로

55) 서도, "동북아 FTA의 추진 배경과 전략과제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6, pp.67~72.

다르고 선택하는 구체적 정책도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하여 FTA로 하여금 아직도 이론 상태에 처하여 있다. 이후부터 <모델1>를 선택하는 가 아니면 <모델2>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FTA체결을 위하여 중국은 반드시 다음의 4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가. 농산품 무역의 자유화

농업의 무역보호주의가 각종 수단을 사용하여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발달한 국가들의 공동화 현상이고 그 배경은 국내정치역량의 영향이다.

부유한 국가에서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분담하는 직접 비용을 감소하여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농업보호에 대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였고 강력한 정치역량의 작용 아래에서 정부도 비교적 쉽게 농업보호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화와 세계화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농업보호의 사회원인과 정치적 원인이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농업이 국가경제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과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이러한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안정의 기초이고 지역 분업을 참여하는 전제 조건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여전히 농산물과 관련하는 무역장벽문제는 WTO의 농산품 협상 중에서 단번에 해결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FTA 협상 중에서 일본은 농산물 무역문제를 토론하지 않거나 되도록 회피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FTA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지연시켰고 동북아의 핵심 국가로서의 지위를 약화시켰으며 동아시아 FTA에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FTA에 따른 무역창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역내국가 중에서 농업에 가장 큰 비교우위를 갖는 중국은 농산품 무역의 자유화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본과 한국의 농산품 무역에 대한 규제문제는 효과적인 FTA 결성에 대해 아주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기에 FTA협상 중에서 대상국경제와 사회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FTA를 통해 전체적 경제 이익의 종합적인 평형을 획득하는 토대 위에서 최대한 농산물의 관세인하로 인한 수많은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왕수금(2006), pp. 13-16].

나. 비교열위구조의 시정 곤란

FTA의 관세 감면과 양허조치는 각국의 국내 비교열위산업에게 충격을 가져다줄 수 있고, 이러한 열위산업으로 하여금 피동적으로 생산 혹은 산업 이전을 실시하게 하고 부분적 산업조절의 원가를 담당하게 한다.

그러므로 FTA는 각 국 열위산업의 강력한 반대를 받을 수 있고 혹은 각 국 열위산업 혹은 정부와 기타 국가가 FTA를 체결하는 것을 반대하고 혹은 정부에 보조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정책 결정시에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게 만들고, 경제구조조정 및 발전의 제일 좋은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FTA는 단 시간 내에 비록 각 국의 열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각국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자원배분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FTA에 참여하는 각 국 기업은 전략적 조절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점차적으로 생산을 구성원국과 기타 국가에 이전시킬 수 있고 동시에 국내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 할 수 있으며 다시 경쟁력우위를 쟁취 할 수 있다.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은 자신의 산업구조를 조절 할 수 있고 한 방안으로는 "공정간 분업책략"을 채용 할 수 있고 즉, 수출부속품 등 중간상품을 성원국에서 가공·조립을 진행하고 완제품을 다시 국내로 혹은 현지와 제3국으로 수출해서 판매 하는 것 이다. 다른 한 측면으로는 "산업 차이를 이용한 책략"을 채용하는 것이다. 즉, 부분적 부속품의 생산을 성원국으로 이전하고 각국의 비교우위를 이용해서 상품에 대한 차이를 통한 분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정한 경쟁적 우위 및 국제화 정도가 높은 기업은 국내에서 계속 생산하고 전통적인 수출방식을 채용 하는 것 이외에 지역경제통합 책략을 채용할 수도 있다. 즉, 지역 내에서 연속적이고 완벽한 생산체계를 건립하고 생산과 판매를 진행하는 동시에 연구개발 등 업무를 개척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경제통합의 효과를 이용하여 보다 국제경쟁우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다양화 정도가 아주 높은 동북아지역에서는 하나의 주도 적정량으로 지역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는 비교적 어렵고 집체적인 지혜를 충분히 발휘하여야 하

고 각종 역량의 맞물림 과정에서 평행 점을 찾아야 한다. 때문에 각 국에서는 동북아와 관련되는 정치와 외교 책략을 조절해야 하고 우선 FTA의 경제적적용을 강화하며 FTA를 각 국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하나의 유효적인 방식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동아시아 FTA는 역내각국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산업분업을 진행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산업 내 분업과 무역을 통하여 보다 큰 무역창출 효과를 획득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의 확대, 직접 투자의 증가, 자원배분효율의 제고 및 기술 이전 등 수단을 통하여 경제증가의 동태적효과를 획득 할 수 있다. 만일 동아시아 FTA가 상호관세 감축방면에서 유효적인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다면 중국의 방직품 등과 같은 노동집약형 상품 및 부분 농산품은 예전보다 더욱 많이 일본과 한국 양국의 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고 한국 및 일본의 중고가의 중간상품 및 자본상품도 예전보다 더욱 많이 중국시장에 진출 할 수 있다.

동시에 만일 동아시아 역내각국의 국가 간 FTA가 점차적으로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서비스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등의 영역에서 유효적인 발전을 가진다면 중국의 서비스 업체, 선진국 기술의 도입 및 대외직접투자의 발전에 더욱 큰 시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중·장기 내에서 볼 때 동아시아 FTA는 각 국경제성장 및 경제복지의 성장에 유리하며 상대적으로 한·일 양국보다 낙후한 중국에게는 더욱더 많은 발전시장을 제공 할 수 있고, 중국으로써는 보다 빠른 대응조치를 잘해나가야 한다. 한 측면에서는 자신의 약세적 산업에 유효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주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대폭적인 관세감축과 국외기업의 도전을 맞이하여야 한다. 다른 측면으로는 동아시아 각국이 경제 협력 문제에서 당연히 더욱더 적극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각국의 경제상호보완성이 강하고 시장경제제도로써 각국이 긴밀하게 경제 협력체제를 건립하는 기초적 제도로 존재하고 상호적으로 부단히 확대하는 무역과 투자로써 건립하는 긴밀 형 경제협력체제의 물질적기초도 존재한다.

그리고 근간에 동아시아 역내각국이 PT전자 정보 기출영역에서의 신속한 발전도 각 국가가 긴밀 형 경제협력체제의 건립에 기술적 기초를 제공 해 주었다. 때문에 중국은 각 국가 간에서 이익이 현저하고 기술수평이 가까운 상대적으로 성숙한 산업영역에서 아세안·한·일 각국과 특혜무역배치 혹은 자유무역협

의를 건립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강청연맹" "PT공동체"등 이러한 방식은 약세 산업에 대한 충격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도 누적 될 수 있고 그 후의 동아시아 FTA체결에 기초를 마련 할 수 있다.

또한 FTA를 체결하고 각 조항을 실시 할 때 상호존중, 상호평등, 이익공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협상과 협력의 태도를 채용하여야 한다. 동아시아 역내 각국간 계속 유효적인 대화와 협상메커니즘을 탐구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일본은 정확하게 역사를 인식하고 역사를 거울로 삼아 각 나라와 상호 신임하는 정치관계를 건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동아시아 역내각국이 쌍무 FTA 혹은 동아시아 FTA를 결성하는데 모자랄 수 없는 정치기초이다[왕수금(2006), pp. 13-16].

다. 외교정치적 이기주의

동아시아 역내각국간의 정치 및 외교상의 이기주의가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FTA는 이정한 정도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FTA의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구성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삭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로써 서비스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구성원국간의 경제효율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성정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FTA는 그냥 한 국가가 정치이익을 도모하고 지역정치주도권을 쟁탈하는 도구로 여기고 혹은 국가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외교수단으로 보이고 있다. 이로써 FTA를 한 가지 경제형식으로써의 각 국 경제 협력방면을 촉진하는 한편 당연히 발휘할 수 있는 유효적인 작용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켰다.

라. 역사적 불신감 해소

일본이 20세기 아시아 국가를 침략하는 역사를 정확하게 인정하지 못했기에 한·중 양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로써 한·중 양국의 신임을 잃어버렸으며 대대적으로 동북아에서의 위신을 하락시켰다.

일본과 한·중 양국 정치사의 상호적인 불신임은 한·일 FTA의 협상 진도를 대대적으로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일 및 한·중 FTA가 발전할 수 없는 주요 장애요소가 되었다.

2. 역외 문제점: 미국과의 문제점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는 역외국가인 미국과 갈등을 유발할 여지를 안고 있다. 56) 우선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 추진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급격히 심화시킴으로써 대미국 경제의존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전망이다. 주요 국가(혹은 지역)를 보면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후 미국의 맹방인 영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특히 CEPA 체결 후 홍콩은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경제일체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이었던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07년 현재 대외무역에서 대중무역(22%)이 대미무역(11.7%)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대중국 무역흑자규모도 상당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 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대중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30-40%로 절대적이다. 대만은 천취벤 정부 시절 중국과 정치적으로 상당히 대립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마잉주 정부 출범 후 대륙과의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 아세안은 중국과 FTA를 체결한 후 중국과의 교역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⁵⁷⁾

<표 6> 한중 교역규모 변화추이(단위: 억 달러)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중국 통계	무역규모	440.9	632.7	899.8	1119.9	1343.8	1601.7
	중국의 대한 수출액	155.1	201.2	278.1	351.2	445.6	561.3
	중국의 대한 수입액	285.8	431.6	621.7	768.7	898.2	1040.5
	무역수지	-130.7	-230.6	-343.6	-417.6	-352.6	-479.2
한국 통계	무역규모	411.5	570.2	793.5	1005.6	1180.2	1450.1
	한국의 대중 수출액	237.5	351.1	497.6	619.2	694.6	819.9
	한국의 대중 수입액	173.9	219.1	295.8	386.5	485.6	630.3
	무역수지	63.5	132.1	201.8	232.7	209.0	189.6

자료: www.kita.net

56) 홍정륜, 전개논문, pp.475~478.

57) 홍정륜, 상계논문, p.754.

<표 7>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변화추이(단위: 건, 억 달러)

연도	대세계 투자		대중국 투자			
	건수	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1992	497	12.2	170	34.2	1.4	11.6
1993	689	12.6	382	55.4	2.6	20.9
1994	1,487	23.0	840	56.5	6.4	27.6
1995	1,332	31.0	751	56.4	8.4	27.2
1996	1,472	44.6	740	50.3	9.3	20.9
1997	1,330	37.1	631	47.4	7.4	20.0
1998	617	48.1	266	43.1	7.0	14.5
1999	1,095	33.3	459	41.9	3.7	11.0
2000	2,082	50.7	774	37.2	7.1	14.0
2001	2,153	51.6	1,049	48.7	6.4	12.4
2002	2,490	37.0	1,385	55.6	10.3	27.8
2003	2,809	40.6	1,679	59.8	16.7	41.0
2004	3,764	59.9	2,142	56.9	23.0	38.4
2005	4,389	65.6	2,240	51.0	26.5	40.4
2006	5,185	107.3	2,300	44.4	33.1	30.8
누계	31,391	654.6	15,808		169.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물론 동아시아 FTA체결로 인한 동아시아 국가간의 교역증가는 대미국 교역을 대체하는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미국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중국이 한·중 FTA를 체결할 경우 <모델1>의 동아시아 FTA는 미흡하나마 초보적으로 완성되게 된다. 이 같은 <모델1> 형태의 FTA도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교역을 증가시킴으로써 대미교역을 어느 정도 대체하게 된다. <모델2>의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경제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모델2>는 특히 <모델1>과 달리 거대 경제블록을 형성함으로써 NAFTA나 EU 등 다른 경제블록에 대한 대항블록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 추진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FTA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경제의 개방을 주도하고 있는 WTO가 최근 도하라운드(Doha Round)에서 농산물 부조금과 농산물 무역장벽 문제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면서 FTA가 갖는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⁵⁸⁾ 이는 미국이 WTO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시장개방을 요구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58) 「연합뉴스」, 2008.07.15.

의미한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 후 대외개방의 다음 단계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를 적극 추진해가고 있다. 2008년 8월 현재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홍콩(마카오), 아세안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국과 FTA 산학관 공동연구 마무리단계에 있다. 미국은 2002년 싱가포르, 2007년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나 그 후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FTA성과만으로 보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은 동남아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중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더 나아가 한·중·일 FTA, 동아시아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FTA경쟁에서 현저히 열세에 처하게 된다.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는 경제 영역을 넘어서 정치안보 영역에까지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안보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아시아 국가와 개별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으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PEC 등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이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최근 중국은 아세안+3, 중·아세안 FTA,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강화되면서 정치안보 측면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경제 영역을 넘어서 정치 영역에까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이 미국을 능가한다 할지라도 정치안보에서 미국을 능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에 보주를 맞추고 있으며, 아세안 역시 중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로 미국이 필요하며, 미국에게 9.11 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국가의 해공군기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정치안보상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에 대응하여 2002년 10월 아세안에 '아세안 행동계획(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 EAI)'을 제안하여 양자간 교역과 투자를 늘림으로써 경제협

력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세안 행동계획은 WTO 가입국 중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국가(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와 우선적으로 FTA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⁵⁹⁾ 이는 미국이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영향력 강화가 정치안보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된다.

제 3 절 중국의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 FTA 효과의 극대화

FTA의 영향 즉, 지역 내에 대한 경제영향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⁶⁰⁾

첫째, 지역 내 구성원이 상호간에 관세와 무역수량제한조치를 제거하여 각국 무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둘째, FTA를 체결한 후 지역 내 생산효율제고와 자본 누적 증가 때문에 각 구성국 경제성장가속화의 간접적 효과를 일으켰다.

이상 두 가지는 각각 정태효과와 동태효과라고 말하며 정태효과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영향은 "무역창출효과"이다. "무역창출효과"는 지역 내 구성원 상호간의 거래원가가 하락하고 무역제한이 철폐되기 때문에 본국내에서 고원가의 상품이 지역 내 기타 구성원의 낮은 원가상품으로 대체되고, 또한 상대 구성원의 과거에 기록된 수량과 높은 관세제한이 본국의 낮은 원가상품의 수출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지역 내의 수·출입 양쪽 방향 모두 더 많은 무역기회와 경제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2. 무역마찰 해소를 통한 무역창출효과 극대화

장기적으로 중국과 주변국가의 무역관계는 아주 큰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중에서 일부분의 경제는 여전히 비교적 높은 관세수준을 유지하였고 많은 상품의

59) 이은호, 「현대국제정치학의 이해」 (서울: 오름, 2004), p.636.

60) 서도, 전개 석사학위논문, pp.75~80.

무역수량제한도 여전히 존재하며 반덤핑 등 형식의 무역 분쟁 도 수지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무역 분쟁은 상호적인 무역증진에 비교적 큰 제약을 발생시키고 지역 내 자원배분효율과 구조적 업데이트에 이롭지 못하다.

FTA를 통하여 비교적 커다란 비율 면에서 상호간의 거래원가를 낮출 수 있고 무역수요 증가를 자극하여 각국 간의 노력으로 좀 더 합리하게 변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의 한쪽 방면에서 볼 때 중국의 많은 비교우위 상품은 더욱 더 커다란 시장을 차지하게 되어 연관 산업의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다른 방면에서 볼 때 국내에서 급히 필요하고 충분한 경쟁조건 아래에서 대체 할 수 없는 생산품의 수입원가도 현저하게 하락되어 국내소비와 재생산확대의 수요를 만족 시킬 수 있다. 중국 개혁개방의 20년 동안의 경험에서 나타난 것처럼 무역기회의 증가와 무역규모의 확대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중국의 농산물은 비록 동북아 각국의 농산물에 비해서 비교적 강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적 시장에서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가지지 못 한다. 그러므로 FTA협상에서 동북아 각국에서 농산품 관세를 하락시키기를 승낙하더라도 실시과정에서 동북아 각국은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방직품은 아세안·한·일에 비해서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일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 FTA 체결 후에 중국의 방직품의 수출은 증가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 중국방직업의 상류부문(화학 섬유, 옷감 등)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이러한 부문은 과세인하에서 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

중국의 저부가가치의 전기상품은 동아시아 역내국가 중에서도 일정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전기업무는 동아시아 수직 산업 내에서 분업의 비교적 발달한 산업이고 동아시아 FTA를 체결한 후 중국 최종상품의 수출은 증가 될 수 있지만 중간상품과 자본상품의 수입도 상응하여 증가할 수 있다.

위에 서술한 3개 업종 외에 중국 기타업종은 동아시아 FTA의 관세 인하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국가별로 볼 때 한국 농산품 및 수산품의 관세는 중국보다 대대적으로 높고 어떻게 관세인하의 종류 및 스케줄을 확정하는지는 동아시아 FTA협상의 난점 중 하나이다. 동시에 한국 대부분 제조업상품의 관세는 중국보다 낮고 어떻게 단

계를 나누어서 관세의 종류를 삭감하는 내용도 동아시아 FTA 협상의 초점인 것이다.

일본은 농산물의 관세가 중국보다 약간 높은 것 외에 제조업상품의 관세도 중국보다 매우 낮다. FTA의 협상 중에서 제조업상품에 관련되는 관세율의 설정과 인하의 스케줄 확정 등의 내용은 중·일 양국의 까다로운 문제가 될 것이다.

이상의 인식으로 중국이 협상에 들어서기 전에 반드시 정확하고 자세히 비교적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부문 및 상품을 확인하고 협상 중에서 최대의 여지를 남도록 단계를 나누어서 관세를 줄이는 스케줄을 쟁취하고 혹은 관세인하 특혜의 민감한 상품의 수량을 확인 하여야 한다.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적으로 각 국의 광범위한 다양성을 존중 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난의규칙과 선국부적, 후전체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FTA의 추진내용에서 볼 때 "우선 간단한 것을 고려한다."는 뜻은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제거 하는 것으로부터 점차적으로 거시적경제정책의 조정하고 지역 내의 화폐간의 환율의 파동을 제거하며 서비스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지적재산권보호, 경쟁정책, 환경, 노동, 경제 협력 등의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다. 동시에 분쟁처리 메커니즘을 FTA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삼고 투자, 금융, 반덤핑 등의 분쟁처리의 프로그램과 규칙을 확립해야 한다.

3. 경쟁촉진을 통한 무역전환효과의 최소화

"무역전환효과"는 지역 내 거래원가의 하락으로 인한 기존과 지역 외국가치 간의 무역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내 구성원간의 무역으로 대체하는 것을 나타낸다.

동아시아지역내의 무역비중은 50%정도이며 EU 60%정도에 도달한 주요한 FTA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것도 각국의 지역 외 경제의퇴의 정도가 장기적으로 현저하게 높고 쉽게 외부경제 파장의 영향을 받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중국과 FTA파트너와의 무역관계 발전은 대외무역의 안정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데 유리하고 동태효과를 주요로 "시장확대효과"와 "경쟁촉진효과"가 포함된다. "시장확대효과"는 무역규모의 확대에 따라 생산과 유통의 규

모를 확대시키고 동시에 산업집결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을 가리키며 "경쟁촉진 효과"는 지역 내 통일시장의 형성에 따라 지역내 독과점 업종의 경쟁에 인하여 생산효율을 높이는 것을 나타낸다.

중국에서 FTA를 결성하는 것은 WTO의 기본원리에서 보다 비교우위와 자연친연제품 조건을 결합하여 자신의 경제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협력파트너를 선택하고 상호개방정도를 증가하고 지역시장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국내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방면은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다.

4. FDI 유인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발전 가속화

FTA는 해외직접투자 FDI의 유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 상황 아래에서 FTA협정 자체는 상호투자의 촉진에 관한 내용이 포괄되어 있기에 지역 내의 자본요소 이동에 유리하다.

둘째, 무역과 투자의 관계에서 볼 때 무역확장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국경을 넘은 투자활동도 증가 될 것이다.

셋째, 지역 내의 상품의 국경을 넘어도 유통원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지역외의 기업은 지역 내에서 투자생산한 상품은 전체 지역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하며, 멕시코는 이러한 방면에서 많은 성공과 경험을 얻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주변지역은 중국이 외자를 획득하는 중요한 원천 중의 하나로서 자금원천, 요소조건이 일정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러한 국가와 지역의 경제 상호보완성은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노동력자원우위는 기타 나라의 자본과 기술이 경쟁력과 현실이익으로 전환하는데 대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FTA의 결성에 따라 상호 해외투자 증가는 각국 산업은 더욱 큰 발전기화와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5. 기술 및 금융협력 강화를 통한 통합체 안정성 제고

기술협력영역에서는 사실상 목전의 자유무역지대의 발전 중점이 관세를 중점으로 하는 무역영역으로부터 투자영역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동

아시아 협력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은 기술 경제 협력 방안이고 다시 말하면 경제 기술 협력영역에서의 새로운 방식의 탐색은 아주 중요하다.

전문적 혹은 부문협력 부분에서 각국은 모두 제조업 대국이기 때문에 각국은 이 방면에서 협력잠재력이 아주 크고 이로 협력 돌파구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 지금 많이 제출된 내용으로는 각국의 강철 연합 생산 협력이고 1950년대 유럽의 석탄 및 강철연합의 경영방식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바로 소유의 전문적·부문적 협력의 권고이며, 이러한 단일적인 협력방식은 언급하는 방면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시작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단기적으로 협력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부문은 석유를 대표로 하는 에너지, 교통을 기초로 하는 물류, 강철을 대표로하는 제조업, 아시아 온정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업 등이 포함된다.

금융방면의 협력은 동아시아 역내각국이 이미 금융방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아시아 각 국에게 하나의 심각한 교훈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시아 각 국에서 금융영역의 협조 메커니즘이 없는 상황의 약점을 자명하게 보여 주었다.

지금 한·중·일 3국간은 이미 화폐 교환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곳에 관한 의견을 달성하였고 중국은 이미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나라의 화폐의 교환을 진행하였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제일 경제대국인 한·중·일은 적극적으로 화폐교환 메커니즘에 참가하고, 한 방면으로는 본 지역의 금융 안전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지역성 화폐 기금 및 최종적으로 아시아 원 메커니즘을 형성하는데 기초를 닦아 놓았다. 금융 방면의 협력은 동아시아 각국의 협력이 이미 비교적 높은 격차에 들어섰음을 표명한다.

이와 같은 금융협력의 메커니즘이 확립된다면, 어떤 국가가 국제대출기금의 충격을 받아 외환보유가 부족한 경우에 화폐교환을 참가한 각 국은 교환한 일정한 수량의 화폐를 달러로 교환하여 이 나라를 지원한다. 이런 방식은 금융위기를 대응하는 능력을 보다 더 증가시킬 수 있고, FTA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보다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제5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FTA에 대한 이론적 기반, 동아시아 FTA의 논의의 배경 및 진전사항을 살펴보았다. 또한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모형 및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기존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그러한 경제적 효과와 모형들 중에서 중국에게 어떤 모형이 가장 적합한 FTA모형인지도 파악하였으며, 중국주도의 동아시아 FTA추진전략을 추진내용, 당면 문제점,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중·홍콩(마카오) CEPA, 중·아세안 FTA를 체결하고 동북아에서도 한국으로부터 산학관 공동연구를 이끌어내는 등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9년 8월 현재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는 <모델1>[중국-홍콩-마카오(대만), 중국-아세안, 중국-동북아 등 세 경제협력라인]를 완성해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중·아세안 FTA 외에 한·중 FTA와 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동아시아에서 <모델1>의 FTA는 기본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중국의 동아시아 FTA 추진에 대해 각국은 경제적 실리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이 중국과 FTA를 체결한 것은 자국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적 실리를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중국의 FTA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실리를 확보할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중국과의 FTA가 자국의 경제에 가져다주는 충격을 어느 정도 수요할 것 인가가 중요한 변수이다. 한국과 일본이 중·아세안 FTA 체결에 대응하여 한·아세안 FTA나 일·아세안 FTA를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⁶¹⁾

중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경제적 실리를 대폭 양보할 경우에도 <모델1>의 FTA는 어느 정도 실현을 앞당길 수 있으나 <모델2>[미주나 유럽에 상응하는 동아시아 FTA]를 실현하는 것을 쉽지 않을 것이다. <모델2>의 FTA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대적 이익에 대한 민감한 반응, 패권국의 부재, 제도의 부재 등 제약요인에 직면해 있다. 중국이 주도적으로 <모델2>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적 이익에 민감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양보하면 될

61) 홍정륜, 전제논문, pp.478~479.

것이다. 다음으로 패권국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스스로 패권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은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공공재를 제공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북아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은 중국이 제공하는 좋은 공공재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의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현실적인 제약 외에도 동 FTA 추진과정에서 개별국가와의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는 일본, 아세안 등 역내 국가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특히 일본의 반발 내지 비협력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에게 경쟁적 FTA를 유발하는 <모델1>보다는 일본을 포함하는 <모델2>의 형태로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대외무역에서 상당히 큰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미국과 EU로부터 상당한 무역마찰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EU나 NAFTA에 대해 동아시아 FTA라는 경제블록을 형성함으로써 무역마찰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은 중국이 동북아 정치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중국은 일본과 정치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등 역외국가도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국가의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 FTA는 장기적으로 지역성과 폐쇄성을 타파하여 개방적 지역주의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회원국으로 포함시킬 경우 역외마찰을 극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블록과 북미 경제블록이 상호 결합될 수 있도록 양대 거대경제권이 FTA를 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 일체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대외개방을 통한 무역증대라는 WTO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봉국, “한국의 FTA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강보경,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한-중-일 FTA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국제지역 연구」제12 권 제1호, 국제지역학회, 2008, pp.469-494.
- 구기보 · 홍정륜,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EAFTA) 모델연구” 「중국학연구」제43집, 중국학 연구회, 2008, pp.367-396.
- 권 율, “한국, ASEAN+3 기능과 역할 강화해야,” KIEP보도자료, 2005년 1월25일자.
- 권 율 · 정인교 · 김양희 · 권경덕, “동아시아 FTA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용역보고서(최종보고서), 2002.12.23.
- 권택호 · 주경원,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간 무역구조변화와 그 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제31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6, pp.5-30.
- 김도훈, “신정부의 FTA정책 추진방향” 「e-KIET 산업경제정보」제384호, 산업연구원, 2008.2.21일자.
- 김상호 · 이영훈, “동아시아 생산성 논쟁에 대한 재고: 확률적 변경 생산함수 접근법” 「국제지역 연구」제10권 제2호, 국제지역학회, 2006, pp.172-192.
- 김양희, “일본의 대ASEAN FTA 추진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오늘의 세계경제」제08-09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2.28일자.
- 김용민,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CEPEA전략” 「아시아연구」제10권 제2호, 한국아시아학회, 2007, pp.165-188.
- 김한성,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제07-18호, 2007.4.9.
- 리창수 · 이장규, “중국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ISSN 1598-2769, 「대외경제연구」, 제11권 제2호, 2007.12.
- 류화렬, “동북아경제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8.
- 박노경,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의 모형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한 과제도출 및 전망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 경제연구소 학술 연구총서 2: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경제성장II」, 조선대학교 동아시아경제연구소, 2008, pp.27-63.
- 박도준,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상품무역 분야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한국·중국·일본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박상길 · 윤기관 · 정인교, “한-중-일과 미국간 FTA체결이 한국의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제31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6, pp.53-77.
- 박인원,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CGE모형분석” 「국제경제연구」제7권 2호, 2001, pp.31-55.
- 박정욱, “WTO 가입 이후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FTA 추진 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협력동과정 중국 전공 석사 학위논문, 2006.7.
- 백승주, “한·ASEAN 관계의 발전과정 및 협력확대 방향”, 수은해외경제, 2009.6.
- 서도, “동북아 FTA의 추진 배경과 전략과제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

- 학과 국제통상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6.
- 서진교, “한일, 한중 FTA 협상의 바람직한 해법 및 접근방법 제시” KIEP 보도자료, 2008년 4월 1일자.
- 손우식, "ASEAN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4.
- 손일태, “한·중·일 및 아세안의 교역구조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한국의 FTA 전략” 「무역학회지」제32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7, pp.269-292.
- 양홍, "동아시아 경제협력 및 통합을 위한 해결 방안-중국의 관점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지역통상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6.
- 오용탁·정인교, “동아시아내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경제적 효과” 「국제경제연구」제3권 제3호, 1997, pp.65-85.
- 윤기관·정인교·박상길, “한·중·일 FTA에 따른 3국간 국제분업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제통상연구」제9권 제2호, 국제통상학회, 2004, pp.163-199.
- 이창재 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이홍배, “한·중·일 3국간 무역불균형 현상의 구조적 요인분석” 「한일경상논집」제37권, 한일경상학회, 2007, pp.61-87.
- 장윤령, “동아시아FTA, 가능한가?: 중국의 시각,” Occasional Paper Series, 세계경제연구원, 2007.
- 정인교, “한·중·일 FTA 경제효과와 추진여건 분석” 「동북아경제연구」제17권 제3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5, pp.1-26.
- 정인교 외, 「한·중·일 FTA협동연구 총괄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정형곤, “한·중·일 FTA: 정치-경제적 측면의 장애요인” 「보도자료」,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8년 7월 25일자.
- 최낙균·정형곤·김한성,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8-04, 2008.12.
- 최세균·이대섭·주현정, “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 부문 연구(1/2차연도)”,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553|2007.12.
- 최원목, “동아시아 FTA의 전망 및 조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ISSN 1226-2005, 제8권 제1호, 2003.
- 표성렬, “FTA 구상과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인터넷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6.
- 홍정륜, “중국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지역갈등”, 「국제지역연구」제12권 제3호, 국제지역학회, 2008.10.30. pp.457-482.
- 홍정륜,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연구,” 「중국연구」제43권, 국제지역학회, 2008.6. pp.747-764.

[외국문헌]

- 安雪梅, 阙哲云, "东亚新自由贸易区的构建与模式", 「经济论坛」, 2004.
- 陈海晶, 姚顺先, “中日韩FTA的可行性及制约因素分析”, 四川大学经济学院 成都 610065, 2008.4.
- 范爱军, 于峰, "东亚自由贸易区建立的影响因素及其途径选择", 「理论学刊」, 2006.
- 洪慧敏, “中韩贸易合作竞争和贸易纠纷对策”, 上海交通大学安泰经济管理学院, 上海 200000, 「长沙铁道学院学报(社会科学版)」, 2008年6月 第9卷 第2期.
- 凌江怀, 董春柳, "建立东亚自由贸易区的动因, 可行性及模式分析", 「集美大学学报」, 哲学

- 社会科学版, 2004.
- 刘重力, 盛玮, "中日韩 FTA战略比较研究", 南开大学 经济学院, 天津 300071, 「东北亚论坛」, 2008年1月 第17卷 第1期.
- 尹翔硕, "逐步转向自由贸易—中韩经济发展阶段和相应贸易战略的比较", 「国际贸易」 2003年 第4期.
- 郑昭阳, 孟猛, "东北亚自由贸易区的路径选择及经济影响分析", 「经济纵横」.
- Bchir, M. H., and Michel Fouquin(2006), 「Economic Integration in Asi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Versus Asian Single Market」, *CEPII*, No, 2006-15.
- Cheong Inkyo(2005), "Estimation of Economic Effects of FTAs in East Asia—CGE Approach"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edited by Ahn Choong Young, Baldwin Richard E., and Cheong Inkyo, pp.139-155.
- Cheong Inkyo(2002),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Seoul, KIEP.
- Hong Yiseok(2005), "The Economic Effects of Bilateral Free Trade Areas among ASEAN, China, Japan, and Korea"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85-102.
- Jin, Hyun Joung, Koo, Won W., and Sul, Bongsik(2006), "The Effect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among China, Japan, and South Korea"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Vol.31, No.2, pp.55-72.
- Kawai Masahiro, and Wignaraja G.(2008), "Regionalism as an Engine of Multilateralism: A Case for a Single East Asian FTA" *Working Paper Series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pp.1-38.
- Loke, Wai-Heng(2007), "Equilibrium Coalition Structure of ASEAN Ten and ASEAN Ten Plus Three" *memio*, pp.1-16.
- Termsak Chalermapalanupap(2005), "An East Asian FTA: A New Frontier of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edited by Ahn Choong Young, Baldwin Richard E., and Cheong Inkyo, pp.57-74.

[Internet Web Site]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or.kr>)
- WTO/FTA咨询网 (<http://chinawto.mofcom.gov.cn>)
- 中国网 (<http://www.china.com.cn>)
- 中韩贸易网 (<http://www.world21c.com>)
- 中日商务网 (<http://www.made-in-china.co.jp>)
- 中日商桥 (<http://www.bridge69.cm>)
- 中国-东盟自由贸易区 (<http://www.cafta.org.cn>)
- 中国东盟协会网 (<http://www.chinaasean.org>)
- 中国-东盟自由贸易网 (<http://www.chinaaseantrade.com>)
- 中国农业外经贸信息网 (<http://www.cafte.gov.cn>)

